수산·어촌분야 미래 발전방향 원탁회의

일 시 2021. 12. 8.(수), 14:00~17:00

장 소 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

주최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어촌분야 미래 발전방향」 원탁회의

1. 원탁회의 개요

□ **(목적)** 포스트 코로나, 기후 변화, 식량 위기, 어촌 소멸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어촌 분야의 미래를 준비·논의하기 위한 토론

□ **(일시/장소)** 2021년 12월 8일(수), 14:00~17:00/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

□ **(참석자)** 농특위, 부처·지자체, 학계, 업계, 전문가 등 50명

□ **(주최/주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운영 방식

□ 수산·어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 인식 공유, 분과별 전문가 논의, 종합토론을 통한 수산·어촌 미래 발전방향 도출

- **(주제발표)** 미래 수산·어촌 발전방향(부경대학교 이헌동 교수)
- **(테이블 구성)** 6개* 분과별 전문가 테이블 구성, 수산특위 위원 등 분과장 참석

  * 연근해어업, 양식산업, 어촌 경제, 어촌 삶의 질, 수산물 소비, 국제 협력

3. 원탁회의 참석자 현황

□ 분과별 전문가 구성

- 각 분과별 토론 효율성을 위해 테이블당 참가인원 7명으로 준비(농특위 위원, 해수부 관계자, 산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 총 참석 인원 : 48명 이내(VVIP 3, 발표자 1, 종합토론 좌장 1, 분과장 6, 토론자 36, 수산혁신특별위원장 1)

  * 간사, 언론기자, 행사진행 스텝 등은 인원수 불포함

Program

＊ (사회) 손우기 주무관 (전라북도의회사무처)

<table>
<tr><th>시간</th><th>순서</th><th colspan="6">주요내용</th></tr>
<tr><td>13:30-14:00
(30분)</td><td>등 록</td><td colspan="6">참석자 등록</td></tr>
<tr><td>14:00-14:15
(15분)</td><td>개회사
환영사</td><td colspan="6">안인숙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
서봉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대표</td></tr>
<tr><td>14:15-14:40
(25분)</td><td>발 표</td><td colspan="6">미래 수산·어촌 발전 방향
이헌동 부경대학교 교수</td></tr>
<tr><td rowspan="2">14:40-16:00
(80분)</td><td rowspan="2">토 론</td><td colspan="6">전문가 원탁토론
[분과별 테이블]</td></tr>
<tr><td>연근해
어업</td><td>양식
산업</td><td>어촌 경제</td><td>어촌
삶의 질</td><td>수산물
소비</td><td>국제 협력</td></tr>
<tr><td>16:00-16:10
(10분)</td><td colspan="7">휴식 및 분야별 발표 내용 정리</td></tr>
<tr><td rowspan="2">16:10-17:00</td><td rowspan="2">종합토론 및
폐회</td><td colspan="6">분야별 발표 (6개 분야 각 5분씩) 및 종합토론
좌장 : 이성우 위원</td></tr>
<tr><td colspan="6">마무리 말씀
류정곤 수산혁신특별위원장</td></tr>
</table>

Contents

개 회 사 | **안인숙**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

환 영 사 | **서봉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대표

Ⅰ. 발표자료

1. 미래 수산·어촌 발전 방향 ········ 3
   - 이헌동 부경대학교 교수

Ⅱ. 토론자료 (분과별)

1. 연근해어업분과 토론문 ········ 19

2. 양식산업분과 토론문 ········ 29

3. 어촌경제분과 토론문 ········ 39

4. 어촌삶의질분과 토론문 ········ 49

5. 수산물소비분과 토론문 ········ 61

6. 국제협력분과 토론문 ········ 73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입니다.

수산어촌분야 미래 발전방향 원탁회의에 함께 해주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준택 회장님, 정부 관계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지구 온난화, 식량 위기 등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와 환경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범국가 차원의 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이용하는 수산업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해수온 상승과 어업자원 고갈, 해양환경 훼손, 어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는 산업기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삶의 터전, 수산물 생산의 전진기지이자 수산물 유통의 시작점인 어촌도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가인구 초고령화와 어촌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향후 30년 이내 80% 이상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산업 어촌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원탁회의는 수산어촌 분야 탄소중립 대응, 지방소멸시대 어촌사회 유지, 식량위기 상황에서 수산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연근해어업, 양식산업, 어촌경제, 어촌 삶의 질, 수산물 소비, 국제협력 분야로 나누어 각계 관계자가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농특위는 지난 3월 수산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수산업을 둘러싼 대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산어촌 분야를 둘러싼 중점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촌 지역소멸 대응과 수산분야 탄소중립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범부처 자문기관으로서 농특위는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돌아오는 복지어촌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부처 간 의견조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환 영 사

존경하는 정현찬 위원장님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부 관계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수산어촌분야 미래 발전방향 원탁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현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과 수산업은 주요 식량공급원인 수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훼손 등으로 어촌과 수산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 공동화 등 다양한 요인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힘든 여건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어촌과 수산업, 그리고 수산인에게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식량자급을 통한 국가 안보 확보 등 다방면에 걸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어촌과 수산업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원탁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회의를 통해 어촌 소멸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수협중앙회장 임준택

발 표 자 료

【미래 수산·어촌 발전 방향】

▶ 이현동 부경대학교 교수

「수산·어촌분야 미래 발전방향」 원탁회의

미래 수산·어촌 발전방향

2021. 12. 8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립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경제학부(자원환경경제전공) 이헌동

〈 목 차 〉

1. 숫자로 본 우리나라 수산·어촌

2. 글로벌 수산환경 변화

3. 수산·어촌의 실태와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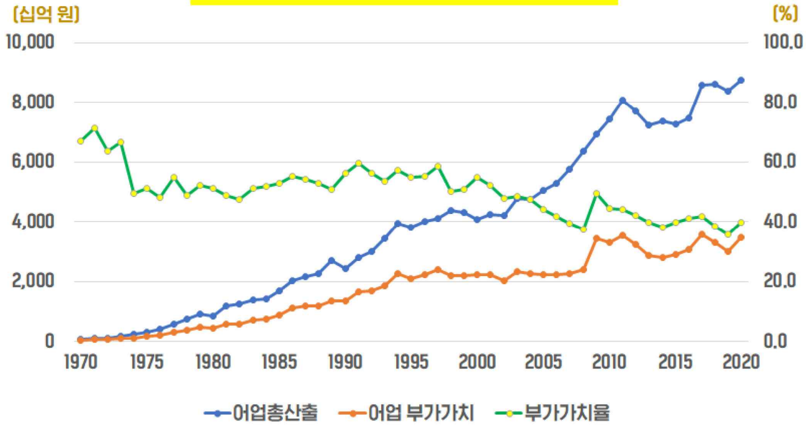
4. 미래 수산·어촌 발전방향

1. 숫자로 본 우리나라 수산·어촌

➢ 0.2%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 경제 전체 GDP에서 어업의 비중(%) : ('70) 1.6 → ('80) 1.1 → ('90) 0.7 → ('00) 0.3 → ('20) 0.2
- 2020년 어업 총산출은 약 8조 7천 억원, 부가가치(GDP)는 3조 5천 억원
- 부가가치율은 계속 하락, 산업의 채산성 악화 : ('70) 67.0% → ('00) 54.8% → ('20) 39.7%

<어업 총산출 및 부가가치, 부가가치율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3

1. 숫자로 본 우리나라 수산·어촌

➢ 수산가공산업, 이미 전통적인 수산업 규모를 넘어서

- 수산가공품이 수산물에 비해 총산출 규모가 27.7% 더 큰 것으로 집계
-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수산양식, 수산가공의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은 수준
- 국민경제에서의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 생산유발효과는?(영향력계수, 전 산업 평균 1)
  - 수산가공품 1.26으로 전체 산업(165개) 중 11위 vs 수산물 1.05로 66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산업의 총산출 구성>

단위 : 억원, %

구분	수산물			수산가공품
	합계	수산어획	수산양식	
중간투입	54,091	30,989	23,102	87,230
부가가치	29,585	20,367	9,218	19,594
총투입(=총산출)	83,676	51,356	32,320	106,824
부가가치율	35.4	39.7	28.5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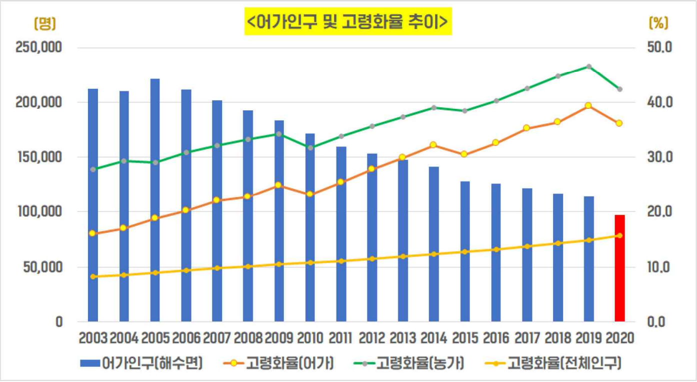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019년 산업연관표.

4

1. 숫자로 본 우리나라 수산·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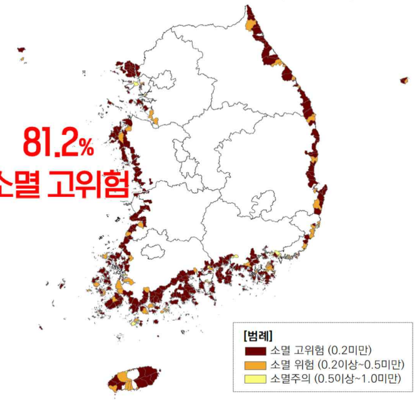
➢ '20년 어가인구 1년 만에 15%나 감소

- 어가인구 감소 추세, 농가인구 감소보다 더 빠르다…
  - 지난 40년간(1980~2020) 인구의 연평균 감소율 : 농가인구 -3.9%, 어가인구 -5.0%
- 65세 이상 고령화율(2020) : 우리나라 인구 15.7%, 농가인구 42.3%, 어가인구 36.0%
- 보건·복지, 교육, 문화·여가 등 어촌의 낮은 삶의 질 만족도, 지역 소멸의 원인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추계인구

어촌 지역소멸지수 전망(204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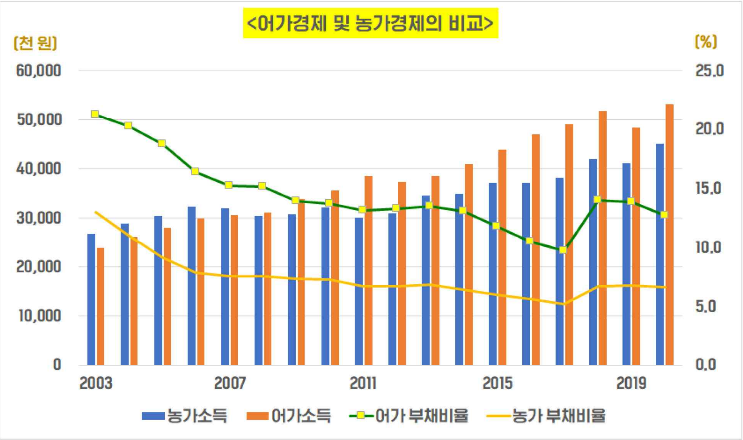
자료 : 박상우, 어촌사회 전망과 이슈, 2021 해양수산전망대회.

5

1. 숫자로 본 우리나라 수산·어촌

➢ 어가소득 5천만 원 시대, 그러나 실상은

- 어가소득은 꾸준히 증가 추세, 2020년 5,319만 원(농가 4,503, 도시근로자가구 7,236)
  -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어업소득 비중 42%(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 26%)
- '20년 농어가 비교(만원) : 어가소득 5,319, 경영비 5,360 vs 농가소득 4,503, 경영비 2,421
- 자산 대비 부채비율 12.7%로 농가(6.6%)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농가경제조사.

6

1. 숫자로 본 우리나라 수산·어촌

➢ 수산물 자급률 68.4%, 1인당 수산물 소비량 69.8kg?

• 수산물 총공급량(천 톤) : ('90) 3,931 → ('00) 4,508 → ('10) 5,379 → ('19) 6,961

• 어류, 패류는 수입이 국내생산을 초과, 수산물 공급에 있어 수입 비중 계속 확대

• 1인당 소비량(kg) : ('90) 36.2 → ('00) 36.7 → ('10) 51.2 → ('19) 69.8(어류 25.6, 패류 16.7, 해조류 27.6)

※ 양식장 사료로 투입되는 소형어, 전복먹이용 미역·다시마 제외 시 소비량은 크게 감소(약 40kg대 중반)

<수산물 수급표(2019년)>

단위 : 천 톤, %

구분	생산(A)	수입	이입	총공급	이월	수출	소비(B)	자급률 (A/B)
어류	1,214	1,832	264	3,310	187	555	2,568	47.3
패류	785	944	59	1,787	55	213	1,520	51.6
해조류	1,821	42	0	1,864	0	362	1,501	121.3
수산물 전체	3,820	2,818	323	6,961	242	1,131	5,588	68.4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식품수급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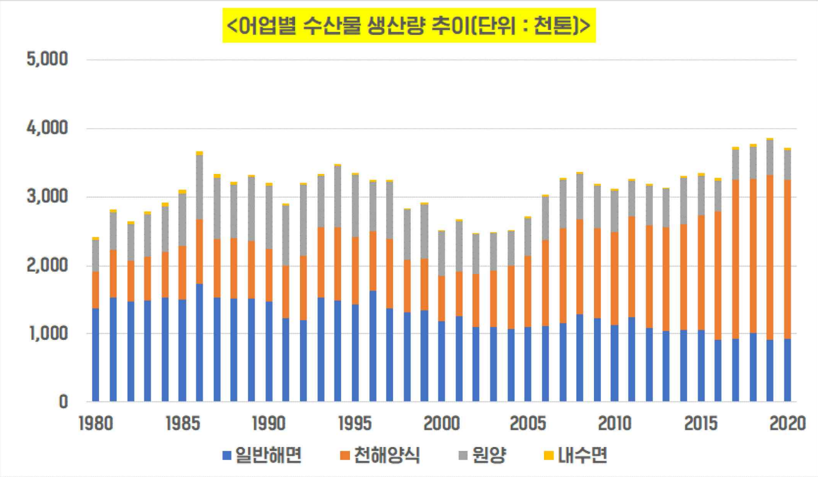
1. 숫자로 본 우리나라 수산·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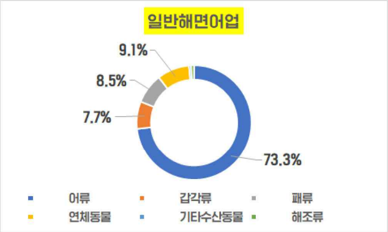
➢ '20년 수산물 생산 371만 톤, 양식이 전체 생산의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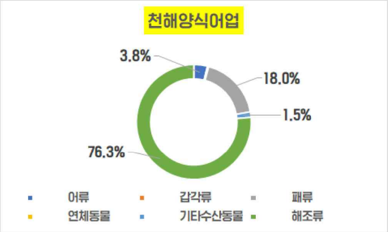
• 일반해면어업 생산의 감소세 지속, 2020년 93만 톤으로 전체 생산의 25% 차지

• 양식생산의 급격한 증가세 불구, 76%가 해조류, 어류는 8.8만 톤에 불과

• 원양어업도 1992년을 정점으로 생산 감소세 지속, 2020년 44만 톤으로 전체의 12%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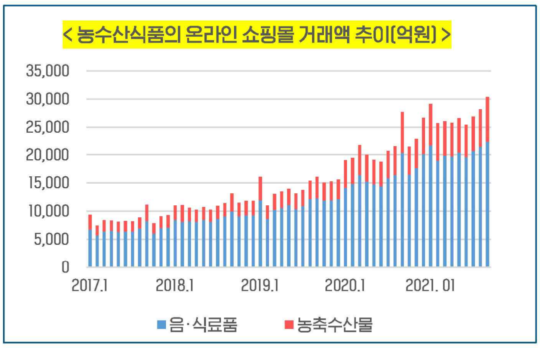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8

1. 숫자로 본 우리나라 수산·어촌

➢ 온라인 식품유통 시대, 산지위판장과 도매시장의 미래는?

- 코로나19 이후 식료품,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구매 급격히 증가 / ('17) 10.4조원 →('20) 25.9조원
- 산지위판장 경유 수산물 계통출하율은 연근해 85%, 양식 32% 수준(최근 5년 평균)
  - 산지위판장 211개소 중 86개소가 2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위생·안전관리 매우 취약
- 높은 수산물 유통비용, 낮은 생산자수취율
  - (농산물) 생산자수취율 52.5%, 유통비용율 47.5% vs (수산물) 생산자수취율 42.8%, 유통비용율 57.2%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도매시장 거래실적(톤, 억원)>

구분	도매시장 전체		수산부류		수산부류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0년	6,130	61,549	409	9,019	6.7	14.7
2010년	6,873	123,196	395	13,657	5.7	11.1
2020년	7,135	148,682	317	15,604	4.4	10.5
CAGR(%)	0.8	4.5	-1.3	2.8	-2.0	-1.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9

1. 숫자로 본 우리나라 수산·어촌

➢ 수산물 가공과 수출입

- 최근 원료 수산물 생산 감소 영향, 저차가공(단순냉동) 비중 크게 감소 : ('10) 60% → ('19) 35%
- 식료품 제조업 평균 대비 수산가공업은 출하액 43%, 부가가치 44% 수준에 불과
- 2020년 수산물 수출 23.2억 달러, 국가·품목의 편중이 심함 / 수입 56.2억 달러

< 국내 식품산업 유형별 사업체 현황(개소, 명, 백만 원,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당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식료품 제조업(A)	5,196	202,380	38.9	15,046	5,160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944	39,689	42.0	15,921	3,961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B)	964	28,873	30.0	6,521	2,271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321	9,375	29.2	18,337	5,583
기타 식품 제조업	1,939	85,894	44.3	14,173	6,146
식료품 제조업 평균 대비(B/A*100)	18.5	14.3	76.9	43.3	44.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20년 수산물 수출 23.2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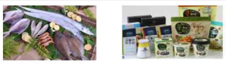
수출 국가

- 일본 6.6, 중국 4.4, 미국 3.2 억 $
- 3개국이 전체의 61% 차지

수출 품목

- 김 6.0, 참치 5.3, 게 1.0억 $ 등
- 2개 수산물이 전체의 49% 차지

가공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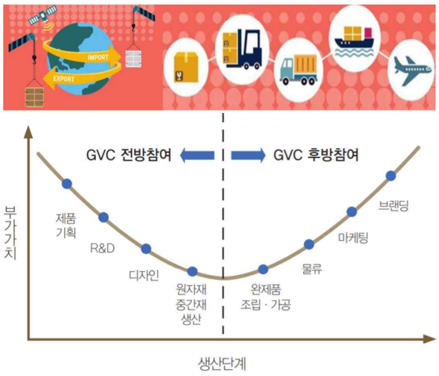
- 원어(냉동, 신선냉장, 냉동) : 55%
- 가공품(건조, 통조림 등) 45%

10

2. 글로벌 수산환경 변화

➢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COVID-19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년 新기후체계 출범, 탄소중립 이행, ESG 확산
  - 한국, 세계 11위 온실가스 다배출국가(OECD 5위),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 목표
- (4차 산업혁명) 인류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초래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 AI, IoT, 로봇,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은 수산·어촌에도 대대적 변화 촉발, 新푸드 시스템 실현 기대
- (세계경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Untact 기술 중심 사회로 전환



11

2. 글로벌 수산환경 변화

➢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의 변화

간편함, 편의성 추구

조리시간 절약 HMR 가공식품 선호, 쇼핑이 편한 대형마트 선호, 편의점 도시락 시장 급성장

지속가능성, 건강, 안전 중시

친환경·유기식품, 프리미엄식품 선호, 윤리적 소비, 환경보호 등 공동체가치 공유식품 선호

소비 다양성, 복잡성 증대

1인 가구 증대로 젊은 층 식품구매 증대, 먹방·쿡방 등 요리 관심 증대, 인구구조 변화, 소비자 세분화 제품 증대

COVID-19, 비대면 소비 확대

배달, 밀키트, RMR 등 온라인 (e-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 포스트 코로나 식품소비 시대

소비의 프리미엄화, 고급화

과거 먹기 힘들었던 고급 수산물, 고품질 프리미엄 수산식품 판매 급증, 수산식품의 새로운 카테고리 형성

제품 디자인, 패키징 중요성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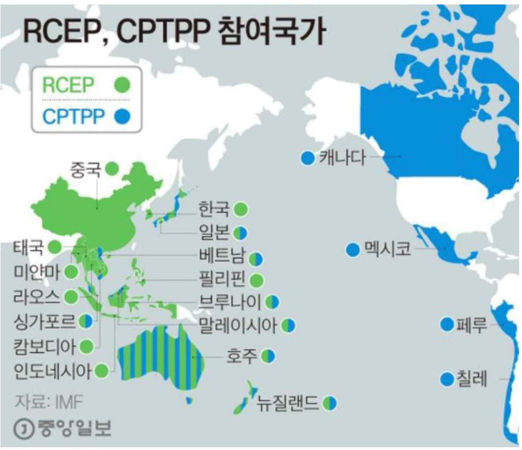
포장, 디자인이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 찜팩포장, 휘슬링쿡 포장, 스킨포장 등, 첨단 신기술 총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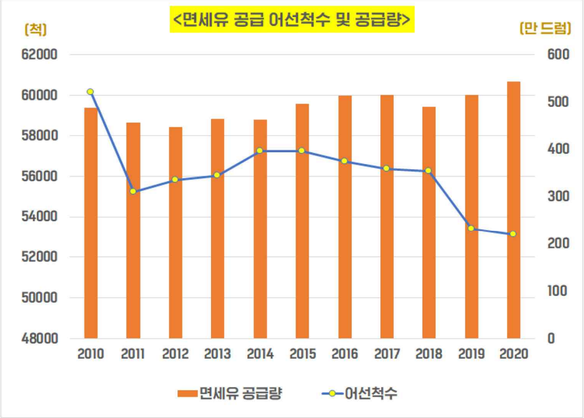
12

2. 글로벌 수산환경 변화

➢ 글로벌 무역질서 개편, 성큼 다가온 WTO 수산보조금 협상

-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지위 확립을 위해 RCEP 후속조치 이행, CPTPP 등 메가 FTA 추진 확대
-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 향후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한 이목 집중
- 가장 큰 이슈, 면세유와 영어자금, 이 고차방정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자료 :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13

2. 글로벌 수산환경 변화

14

3. 수산·어촌의 실태와 문제점

➢ [연근해어업] 불법어업 지속, TAC 확대의 제약, 어선감척의 실효성 논란

- 연근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확대에도 불구, 불법행위는 지속 발생
- TAC 미참여 업종의 대상종 어획, 낮은 한도 소진율, TAC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어선 노후화, 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 효율성 저하, 외국인 어선원 크게 증가
- 마력 제한 없는 장기간 어선감척으로 오히려 어획노력량 증가, 단기 집중 감척 필요성 제기

➢ [양식어업] 어장환경 악화, 갈길 먼 첨단양식, 수급·가격 변동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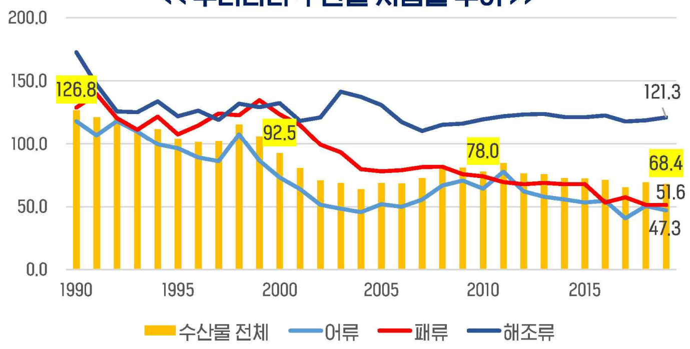
- 기후변화, 거대 자연재해 및 수산질병 빈발 등 양식장의 환경변화 대응 한계
- '빛 좋은 개살구' :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의 급증 vs 어류와 패류 양식의 정체
- 영세 소규모 양식어가 중심의 산업구조, 양식어가 평균규모 3ha 미만, 20~30톤 생산
  (※ 노르웨이 1개 회사 생산량이 국내 어류생산량 약 8만 톤의 2배 생산)
- 계획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 현실에서는 가격 폭등·락 빈번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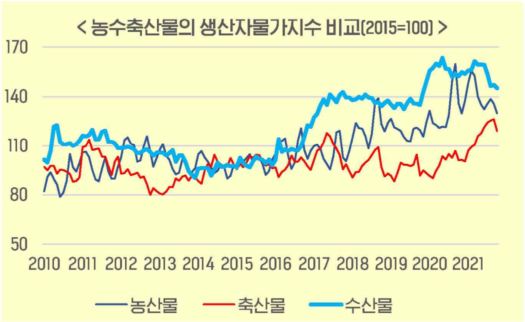
15

3. 수산·어촌의 실태와 문제점

➢ [수산물 수급] 총공급에서 수입 비중 증가, 자급률 하락 추세

- (생산) 양식 생산 증가에도 불구, 연근해 및 원양 생산은 1990년 대비 2020년 43% 감소
- [수출] 90년 106만 톤 → 19년 113만 톤 / [수입] 90년 38만 톤 → 19년 282만 톤
  - 어패류의 총공급량 대비 수입 비중(%) : ['90] 10.5 → ['00] 34.2 → ['10] 43.2 → ['19] 54.5
- 농산물, 축산물과 비교, 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가격 변동계수 : 농산물 0.13, 축산물 0.08, 수산물 0.15





16

3. 수산·어촌의 실태와 문제점

➢ [유통·수산식품] 4차 첨단기술·Untact 시대, 산지유통은 과거에 머물러

- 대한민국 수산물 산지유통의 현주소
  - 바닥경매와 고봉입상
  - 기록상장, 형식경매
  - 이중 경매(산지, 도매)
  - 비위생적 목상자
  - 상온 노출, 저온유통 부재
  - 변화를 거부하는 관행

부산일보

시대 바뀌어도 '수산 유통·보관 시스템' 제자리 걸음

- 가공할 원물이 없어지고 있다... 수산업의 위기는 곧 수산식품산업의 위기!
  - 연근해, 원양어업 생산 감소로 수산물 가공량은 '10년 182만 톤 → '19년 131만 톤으로 급감
  -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저차가공(단순냉동) 비중은 감소 : ('10) 60% → ('19) 35%
  - 국제정세, 무역분쟁,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 심화 등 대내외 교역환경 변화로 생산 및 수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 상존
  -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에 한계, 원료 수입의존도 심화

17

3. 수산·어촌의 실태와 문제점

➢ [어촌] 취약한 조건불리성, 여전한 진입장벽, 최근 일손 부족 심각한 상황

- 섬·어촌의 열악한 조건불리성, 낮은 삶의 질 여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
- 포화 상태의 면허·허가, 폐쇄성, 정보 부족 등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
- 어업의존도, 어가소득률 최근 들어 크게 저하
- 코로나19 입국 제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어업·양식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생산 차질

경향신문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바다①]외국인 노동자 사라진 어촌...오징어 풍년에도 고깃배는 뜰 수 없었다

부산일보

제철 맞았는데 일손 못 구해…'개점휴업' 남해안 굴

<입지유형별 지역소멸지수>

18

4. 미래 수산·어촌 발전방향

어선어업 : 수산자원의 회복, 지속가능한 어업구조 실현

➢ 연근해어업 재건 혁신기금 신설 및 특별법 제정

- 단기간의 집중적인 어선 감척 추진을 위해 감척예산 증액, 특별법 제정
- 어선, 어구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 마련
- 어선원 안전 및 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 현대화 추진(※ 어획-유통단계의 효율성·품질관리 고려)

➢ TAC 전면 확대, 수산자원관리의 내실화 등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 TAC 중심의 자원관리 확대, 업종별 허가에서 어종별 허가제로의 전환 검토
-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바다숲, 수산종자 방류 등)의 효과 검증, 사업 실효성 제고

➢ ODA 연계 어장확보 노력, 원양어선 경쟁력 강화, 전자모니터링 제도 도입

- 수원국 니즈(관광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에 따른 ODA 연계, 어장확보 협력사업 발굴
-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건조 지원을 위한 안전펀드 확대, IUU 어업 근절 위한 EM제도 도입

19

4. 미래 수산·어촌 발전방향

양식어업 : 친환경·자본집약적·첨단양식으로의 전환

➢ 미래 스마트 육상양식산업 육성

- 바이오플락, 아쿠아포닉스 등 미래 육상양식 기술·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기존 노동집약적·경험에 의존하던 양식 → 첨단 신기술 접목, 자본집약적·지식산업으로 전환
- 해조류 종자은행, 대서양연어 국산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 우수 유전자원 관리 강화

➢ 어장환경관리의 실효성 제고, 어장휴식직불제 신설 검토

- 전국 연안의 노후화 어장 어장관리해역 지정 확대(현재 옹진군 외 전무)
- 어장휴식, 어장정화·정비 등 어장관리수단의 실행력·실효성 제고
- 공익직접지불에 '어장휴식 직불제' 신설

➢ 양식어업의 체질 강화 및 구조 개선

- 전국의 면허, 어장, 재해 등의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면허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 친환경 부표 사용 의무화,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제약요인의 검토 및 현실화 방안 마련

20

4. 미래 수산·어촌 발전방향

수급관리 : 위기대응에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전환, 수급정책 인프라 고도화

➢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수급 조절, 가격폭락 시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양식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 신설, 역할과 기능 마련
- 정부비축사업 내실화, 시장가격 안정화 수준만큼 비축 규모 확대, 수급조절 대응 역량 강화
- 생산비 이하 가격 폭락으로 도산 위기 시, 긴급 수매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 활·선어를 수협에서 가공용으로 전환·판매, 군·학교 급식에 특별 지원, 취약계층 무상 지원

➢ 수산물 수급관리 패러다임 전환, 의무자조금으로의 단계적 전환

- 품목별 자율적 수급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자조금 품목 확대, 의무자조금 도입·시행

➢ 수산정책의 근간, 수산물 수급통계의 자체 생산·활용 및 고도화

- 농업기관 통계 의존에서 탈피, 수급통계 및 도소매가격 통계 조사·분석 별도 사업화
- 수산물 수급통계의 블랙박스, 재고 통계의 개선을 통한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21

4. 미래 수산·어촌 발전방향

※ 수산통계의 큰 구멍!

- 산업통계의 기본은 투입(input)과 생산(output)의 파악, 수산통계는 input을 파악할 수 있는 생산비 통계가 대단히 취약 → 어가 교역조건 진단 불가(※ 농업 : 농가판매가격지수 & 구입가격지수)
- 공익형 직불제, 양식재해보험, FTA 피해 보전 등 어업인 지원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
- 수산물 유통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aT 소매가격, 현실과 통계의 괴리 확대

<1차 산업의 생산비(소득) 관련 국가승인통계 지정현황>

구분		작성기관	최초 실시연도	대상 품목
농업	농산물 소득조사	농촌진흥청	1970	겉보리, 맥주보리, 노지풋옥수수, 고구마, 봄감자, 가을감자, 수박, 봄무, 가을무, 고랭지무, 당근, 봄배추, 가을배추, 고랭지배추, 시금치, 양배추 등 50개 작물
	농산물 생산비조사	통계청	1953	논벼, 마늘, 양파, 고추, 참깨, 콩
임업	임산물 생산비조사	산림청	2007	밤, 표고, 떫은감, 대추, 호두, 더덕, 곰취
축산업	축산물 생산비조사	통계청	1978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육우, 젖소, 비육돈, 산란계, 육계
양식업	수협(수산경제연구원)에서 2009~2015 추진하다 신뢰성 문제로 중단			

22

4. 미래 수산·어촌 발전방향

수산식품·유통 : 산지유통 4.0 혁신, 온라인 유통으로의 점진적 전환, 수산물 가치 혁신

➤ **온라인 유통으로의 점진적 전환, 열악한 유통조성기능 확충**

- 거래시스템 표준 정립을 통한 온라인 경매시스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수산물 유통효율화의 핵심! 유통조성기능(표준화, 규격화, 등급화) 확충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산지수협(FPC)의 가공·상품화 역량 강화, 수익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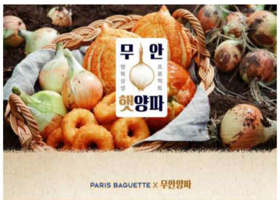
➤ **일상에서의 가치 혁신! 수출+국내 소비자 선호 수산식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 지역수산물 + 식품·외식업계의 상생 협력을 통한 가공·상품화 지원사업 발굴
- 스낵김을 이을 제2의 K-Seafood 발굴,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산식품업계에 던져진 숙제

☑ 공차의 초당옥수수

☑ 맥도날드의 창녕갈릭버거

☑ 파리바게트의 무안양파빵



강원도 알감자빵, 논산 생딸기 케이크, 제주 구좌 당근 케이크 등

☑ 지역수산물의 가능성은?

4. 미래 수산·어촌 발전방향

어촌·어업인 : 어촌 공간관리계획 마련, 삶의 질 개선, 어가소득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

➤ **어촌공간관리계획 마련, 섬·어촌의 생활 SOC 및 삶의 질 개선 지원**

- 모바일 빅데이터 활용, 생활인구 및 입지환경적 특수성 고려한 어촌 공간관리계획 수립·추진
- 취약한 보건·복지, 교육, 문화·여가 등 생활 SOC의 기준을 정립, 개선방안 마련
-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응,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섬·어촌의 현장 애로 해소
- 여성어업인 육성·지원체계 강화, 어가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도입

➤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도입, 어업인 소득지원 정책의 틀 전환**

- 공익형 직불제 대상을 모든 어업인으로 확대, 기본형 및 선택형으로 이원화 추진
- 어민수당, 퇴직연금제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적극 검토
- 귀어·귀촌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패키지 지원, 사후관리 강화
- 양식어업의 비과세 범위 확대 등 세제 개선

➤ **어업현장의 노동력 수급 안정화,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 강화**

- 외국인 어선원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신규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4. 미래 수산·어촌 발전방향

글로벌 대응 : 기후변화 대응체계 마련 및 탄소중립 목표 이행, 국제 수산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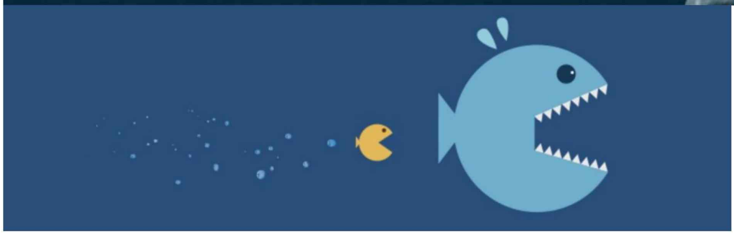
➢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수산업·어촌 만들기

- 환경부 주도, 부처별로 분산된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수산부문의 대응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수산부문의 탄소배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반, 실현 가능한 단계별 이행계획 마련
- 친환경·ESG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 : 전기충전소, 친환경 조업장비, 전기모터 등
- 스마트 어촌, 주민 주도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확대, 어촌의 탈탄소화 유도

➢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및 수산협력 강화

- IUU 어업관리 강화 / 미국·EU 등 주요 수출국 대상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양자협상 대응 강화
- 동북아 해역 불법어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단속 협력 및 공동 수산자원관리 강화
- 해양수산 ODA 전담기관 지정, 수산 ODA 사업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다자 원조사업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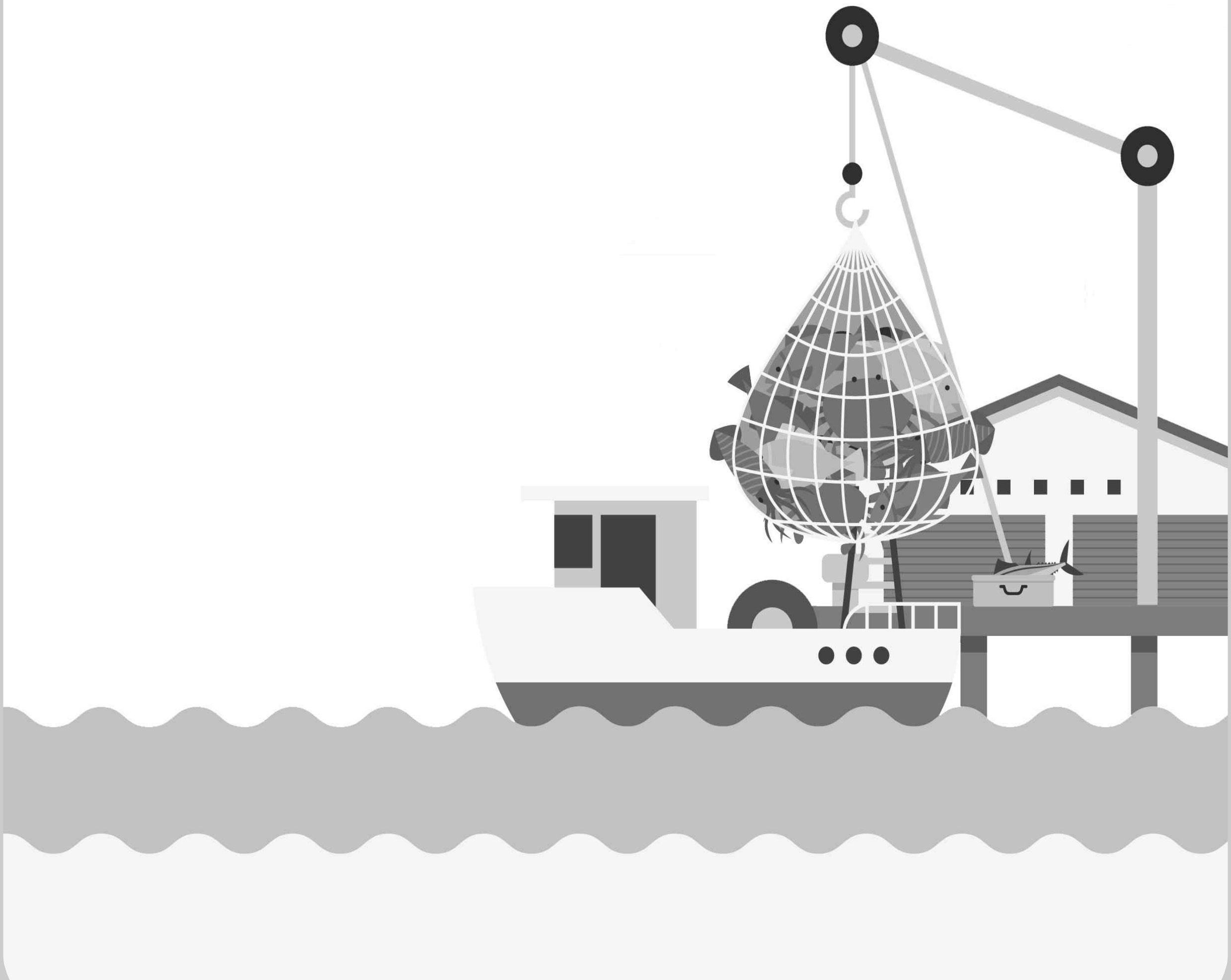
25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자료
(분과별)

1. 연근해어업분과 토론문



01 이정삼 / KMI 어업자원연구실장

□ 연근해어업의 위기 상황

❍ 수산자원 감소로 인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6년의 173만 톤에서 최근 90만 톤대 초반까지 급감

- 생산량 감소와 함께 명목 어업생산금액은 2011년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질 생산금액은 계속 감소(어선어업 어가 실질 어업소득 지속 감소)

❍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국내외 여건변화로 어업경영 악화 전망

- 수산자원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어선 노후화 및 어업인 고령화로 인해 생산효율성 저하 진행
- 어획 관련 국내외 각종 규제 강화 및 시장개방 압력 등으로 추가적 어업비용 상승 및 경영 악화 우려(CPTPP, WTO 수산보조금, 해양포유류 보호 관련 규제 등)

□ '악순환 고리' 탈피 위한 연근해어업 혁신 필요

❍ '악순환 고리'로 연근해어업 상황 악화 일로

- 「어업경영 악화→어획강도 증강→조업경쟁 심화→자원량 및 어획량 감소」의 악순환 지속으로 연근해어업 기반 붕괴마저 제기되는 상황
- 가시적 변화를 발생시킬 수준의 구조적 혁신 없이는 연근해어업 전반 상황 악화 일로

❍ 연근해어업 혁신으로 과거 경험 되풀이에서 벗어나야

-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어획노력량에 대한 상당한 축소 필요
- TAC 확대 및 개별 할당 필요하나 불충분한 배분량에 대한 반발로 어업인 참여 난항
- 장기간에 걸친 어업인 모두의 어획량 삭감 방식이 아닌 단기간 혁신 감척으로 가시적 수산자원 회복 및 잔존 어업인의 경영 개선 도모 필요

□ 감척 수준과 방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 중요

❍ 연근해어업 혁신 관련, 감척 수준과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 필요

- 체계적 실효적 추진 위해 특별법 및 혁신기금 마련 제기되나 공감대 형성 우선

02 한창은 /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

1 정책 우선순위 검토

❑ 최우선 감척사업 추진

○ 1990년대 약 86만㎢인 조업어장은 2016년에는 21% 감소한 69만㎢임에도 연안허가 47,578건, 근해허가 2,639건의 허가정수에 실 허가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업인지원 및 어자원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므로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감척사업에 집중하여 대대적인 허가 정리 필요(장롱허가 및 복합허가, 불법어로행위가 잦은 어법 등)

○ 이후 어자원관리정책을 재정비하여 수산선진국 시스템도입등을 통해 시행함으로서 정책실행 효율성 극대화 필요

2 정책 참여 어업인 인센티브 부여

❑ 정책 신뢰회복 사업추진

○ 수산혁신 2030 중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정착을 위해 연근해어획량의 80%수준까지 TAC제도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임

- 오히려 모든 통계자료가 노출됨으로 인해 참여어업인의 사회적 비용편익 증가되어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놓치게 됨

○ 양적인 제한이 가능한 TAC정책인 만큼 기 참여 업종에 대해 선복량완화등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 신규정책에 대한 참여도를 높임으로서 정책신뢰도 향상

3 자원평가 제도개선

❑ TAC평가제도 개선

○ 지금의 우리 TAC제도는 총허용어획량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획예측량(Prediction)을 산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구 분	내 용
정밀조사	• 직접자원조사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치 : 가입, 성장, 성숙, 사망 및 먹이생물에 관한 정보) • 간접자원조사(어획통계자료, 위판현황자료)
어획동향 및 분포특성 조사	• 수산자원의 시기별(연도별, 월별, 계절별), 해역별(조사수역별)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 어획량 파악
자원량 추정 및 평가	• 소해면적법, 코호트 분석법, 단위노력당 어획량 분석법, 조성 변화에 의한 분석법 및 표지방류법 등을 사용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 즉시 적용가능한 수산재평가제도 시스템 도입

4 인력육성 지원

❑ 수산계고교 인력풀의 체계적인 관리

○ 연근해어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인력 역시 중요하지만 하급선원의 경우 외국인선원에 편중되어 있고 해기사인력의 육성은 전혀 관리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수산계고 승선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정착자금지원과 같은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인력풀 시스템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므로서 산학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5 타산업대비 열악한 수산 예산의 확충

❑ 수산업의 예산확충

○ 수산예산의 경우 대한민국 중앙정부 연간 총 예산대비 0.59%의 비율로 전체 산업대비 낮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같은 산업군의 농업과 비교하여도 약 5.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항목별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농업대비 수산부분은 열악한 예산편성으로 어업인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수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확충이 절실함

[2021년도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세부 내역]

(단위 : 억원)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		해양수산부(수산)	
	구 분	예 산	구 분	예 산
	총 사업비	153,926	총 사업비	26,737
예 산	농업·어촌	149,011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5,252
	- 혁신성장·체질강화	37,081	어업인 소득안정지원	4,394
	- 농가소득·경영안정	41,987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3,706
	- 농촌복지·지역개발	13,326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1,384
	- 양곡관리·유통혁신	36,933	수산행정	1,067
	- 재해대비·기반정비	19,684	수산식품고부가가치화	1,873
	기타사업비	400	어촌어항활성화	8,573
	기본적경비	4,515	해양수산연수	48
			원양협력	440
(기 금)	(기 금)	(71,194)	(기 금)	(538)

<자료출처 : 수협중앙회 한국의 수산예산, 농림축산식품부>

03 해수부 어업정책과

1 자원기반형 어업생산체계 구축

○ TAC **대상**을 **확대**하여 `25년 TAC 관리비중 50% 달성(`21, 29%)을 추진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105억원 → 120)

○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감척**을 추진(`22 예산 1,205억원)하고, **폐업지원금** 지원도 **지속 확대***

* 폐업지원금 산정기준(평년수익액 대비) : (`20) 70% → (`21) 90% → (`22) 100%

2 연안 어업 활성화

○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마을어업권 **행사자격**을 **완화***하고, 신고어업의 사용가능한 **어구 종류**, **어업 형태** 등 명확화(`22.下 고시제정)

* 거주지 제한요건 완화 : (現) 어촌계 관할구역(마을) → (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

○ 노령 어업인 등의 **어선**을 **임대**하길 희망하는 **청년**에게 **임대비**를 **지원**(50%)하는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10척) 추진

3 어업관리 지원체계 개선

○ CCTV 등이 수집한 **영상**을 **AI가 분석**하여 **어획량** 등을 **판단**하는 AI **옵서버**를 **개발*** 하고, **전자어획보고 시스템** 단계적 **적용 확대**

* AI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구축(R&D) : '21～'23, 103억원('22, 31억원)

○ **어종별**(現 어구·어법) **어업허가를 부여**하고 TAC 총량 내 **어선별 어획 쿼터(IQ)를 배분·** 운영하는 **어종별 허가제 도입 검토**

4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등 바다 생태계 회복

○ **바다숲 2,386ha**(누적 2.9만ha)과 **산란·서식장** 5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연안바다목장 5개소** 조성 완료(누적 50개소)

○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폐어구 **수거·처리량 확대**(`21, 121억원 / 2,700톤 → `22, 155억원 / 3,600톤)

04 황선재 / 한국수산자원공단 자원사업본부장

1. 연안생태계 보전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바다숲 조성 확대

○ **(현황)** 연안 해조류 군락은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처로서 가치가 높으나, 매년 **1,200ha의 갯녹음** 발생 추정, 바다숲 조성한 이후 갯녹음 비율 감소*

* 갯녹음 비율(%) : 동해 ('17) 51.9 → ('19) 48.3, 남해 ('18) 15.1 → ('19) 12.6, 제주 ('16) 35.8 → ('19) 33.3

○ **(필요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해양생태 환경 개선의 필요성 대두**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바다숲 54,000ha 조성으로 탄소 18만톤 흡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제2항 (중략) 바다숲의 조성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 **(생태계 복원)** 연안해역에 바다숲 조성 확대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처 등 해양생태계 복원*을 통해 연근해 어업자원 증강 기반** 확보

* 바다숲 경제적 가치는 산림 20배, 농경지 200배, 갯벌 2배 수준('97년, 네이처)으로 생태계 서비스 연간 12조7천억원의 편익 제공('18년, 한국수산경영학회)

** 연간 수산물 잠재 생산력 58백만원/ha(여수 거문도 바다숲의 잠재 생산력 = 수산자원 서식장 가치 34백만원 + 자치어 성육장 가치 24백만원)

○ **(탄소흡수원)** 바다숲은 **연간 3.37톤/ha의 CO_2를 흡수***('19년, 포항공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의 확대 필요

* '20년까지 24,258ha 조성으로 연간 81,83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발생

2.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TAC 제도 확대 및 어업통계 고도화

○ **(현황)** TAC 대상 12개 어종, 14개 업종 대상 실시 및 시범도입 3종

○ **(운영)** 전국 121개 TAC 지정 판매장소의 모니터링(어획량, 소진량 및 생물학적 조사 등) 실시, 수산자원조사원 120명 및 현장사무소 21개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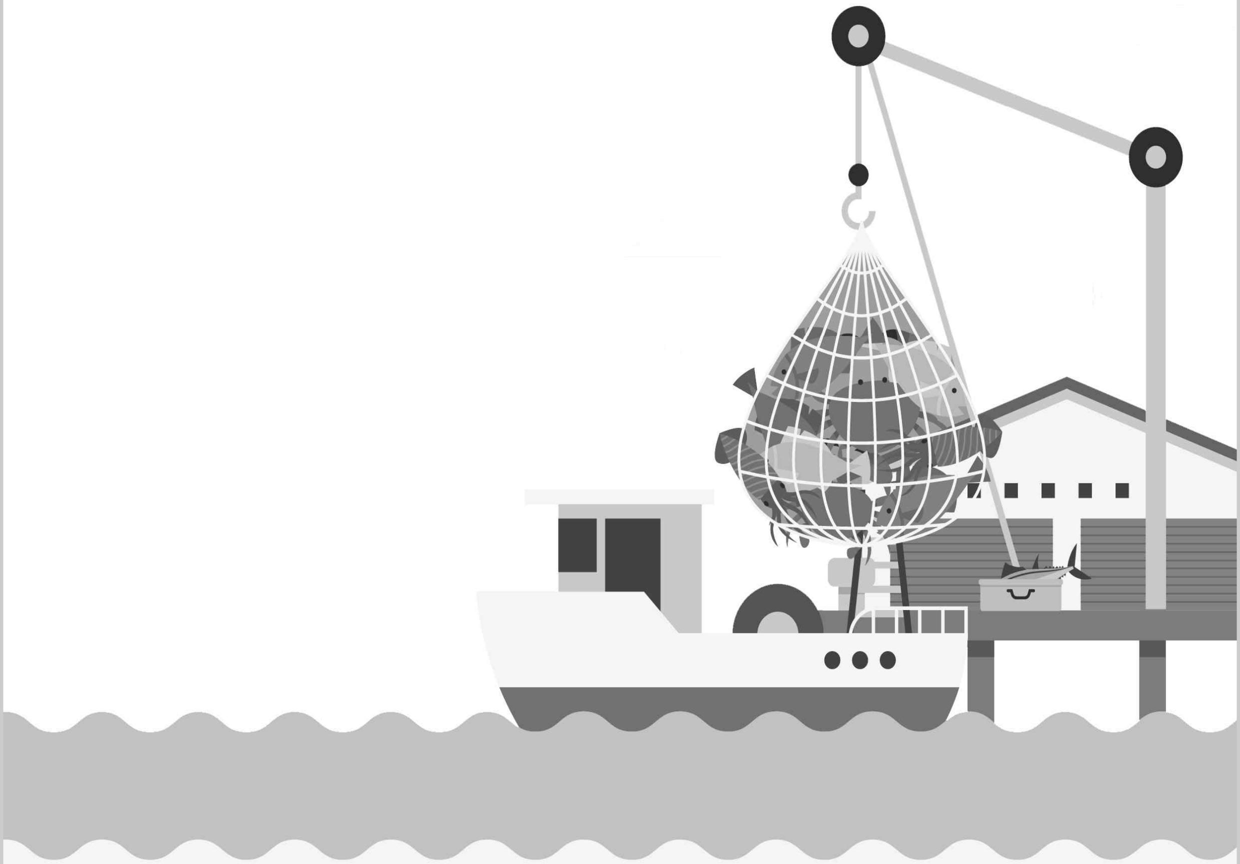
○ **(필요성)**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수산혁신 2030 계획), TAC 관리대상 어획 비율 확대('20년 35%→'25년 50%→'30년 80%)로 조사척수 증가

○ **(정책지원)** TAC 어종·업종 확대, 어업규제 완화, 어업자협약, 어린물고기 포획실태조사 등 정부 자원관리 정책 지원

○ **(해양수산 스마트화)**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IoT 기반 스마트 조사·관리 체계마련으로 영상처리 기반 플랫폼 구축(AI 기반 어업관리체계)

○ **(어업통계 고도화)** 정확한 어획통계 자료 수집으로 자원평가 기초자료 제공 및 실효성 있는 TAC 설정(최근 5년간 TAC 소진율 63.2% 불가)을 위한 IUU어업 및 비계통 판매 근절, 낚시어획물 통계화, 조사통계방법 개선, 관련기관 협의체(통계청, 수과원, KMI, FIRA) 지속적 운영

2. 양식산업분과 토론문



0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친환경·스마트 전환

- 스티로폼부표 설치금지 단계적 시행(잠정), 배합사료 품질향상 및 현장 적용 시험 확대, 친환경 생산직불제 지원 등
- 육상 유수식양식장의 종자입식, 수질관리 등의 데이터화를 통한 넙치폐사율 저감 및 친환경 개체굴 양식 보급 지원 등
- 양식면허·심사평가제 도입(~'25)하고, 어장오염퇴적물 제거사업 지원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건립, 재생에너지 시설·수질정화장비,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내수면어촌 재생사업 등 지원

○ 신산업 육성

- 해조류를 활용한 대체육·배양육, 펫사료, 메디푸드 등의 산업을 육성하고, 계약재배 방식 등을 통한 안정적인 원료수급체계 마련
- 종자품질표시제를 확대하고, AI·유전데이터 기반 디지털육종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종자개량 소요기간 단축 및 우량종자 보급
- 수산부산물 재활용산업 육성을 통한 어업인 新소득 기반 마련

○ 수급관리

- 양식장 실태조사·관측 고도화 등을 통해 적정생산량을 제시하고 수급관리위 설치 및 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한 수급조절역량 강화
- 횟감용 판매에 한정된 양식어류를 선어필렛, 밀키트, 간편식 등의 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유연한 수급조절환경 조성

02 수협중앙회 박순철 단장

○ 양식수산물 수급안정화 제고 방안

– 수산물 생산물량 해소와 가격안정 목적으로 시행 중인 수산물정부비축사업에 양식품목이 제외되어 양식품목을 포함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21년 정부비축 지정품목(6개) :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 수급안정화 제고 방안 제시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양식수산물긴급수매지원사업
근거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 「시행령 제21조(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사업목적	양식수산물 정부수매로 산지 가격지지 및 소비자가격 안정
사업재원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 긴급수매자금 추가 편성(양식품목은 '정부비축사업 자금' 비축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별도 자금 편성)
실시방법	(시기) 주생산시기에 수매, 명절 성수기·어한기 등 필요시 방출 (대상)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이 양식한 냉동품 또는 선어 * 급냉가능품목 수급관리위원회(민·관 15인 이내로 구성)에서 선정 (판매) 군납·학교급식 우선 배정, 폐기 후 농가유기농비료로 판매, 사회복지단체 기증 등

– 기관별 역할 (현 수산물정부비축사업 체계와 동일)

- (해양수산부) 수매 및 판매계획 수립, 시행 및 소요자금 지원
- (수협중앙회) 수매품 입고, 보관 및 판매 계획수립 시행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매품 검사

– 행정사항

- 수발기금 '긴급수매자금' 편성, 수산물정부비축시행요령 개정

○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제고 방안

- 기후변화, 자연재해가 빈번한 최근, 양식산업 이슈가 단순 생산 증대에서 환경보호·먹거리 안전 등 공익과 양식산업 지속을 위한 부분으로 전환
-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연안 양식어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교체 지원하여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
    - * 어장관리법 제13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내용) 어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교체 지원
  - (지원조건)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30%

○ 현장의 낮은 정책 수용도

- 스티로폼 부표보다 내구연한이 떨어지고 무거워 작업 불편
- 스티로폼 부표 대비 가격이 약 4~5배 높아 어업인들의 부담 가중
- 지방비의 경우 지자체 여력에 따라 지원률 변경 가능
- 친환경부표 교체에 70%보조(국비35%+지방비35%)를 받더라도 구입비용이 증가하고 교체주기가 빨라져 어업인들이 사용을 기피

【 부표구입 비교 】

(64L 1개 기준, 단위 : 원)

스티로폼 부표		친환경 부표		자부담 (c=b×30%)	교체비용 증가액 (c−a)
내구연한	가격(a)	내구연한	가격(b)		
5년이상	5,800	2~3년	26,000	7,800	2,000(↑)

○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 국비 지원률 상향을 통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 설명회 실시
- 친환경 부표의 품질개선, 단가를 낮추기 위한 R&D 추진 등

03 내수면연합회 나진호 회장

○ 수산물의 소득세 면제

-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 현재 농어업과세현황

▸ 곡물기타식량작물 재배업 – 과세제외

▸ 작물재배업 – 수입금액 10억이하 비과세, 10억초과 과세

▸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어로) – 5천만원이하 비과세. 초과 과세

▸ 양식어업 – 3천만원이하 비과세, 초과과세

- 대책

소득세 면제

▸ 코로나 19로 식량산업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고 지구온난화 수온상승으로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곡물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인 수산물도 식량식품으로 편입이 필요하며 소득세 면제가 절실함

▸ 작물재배업수준 – 수입금액 10억이하 비과세, 10억초과 과세

○ 후계영농·어업 상속세 면제

- 관련법 – 조세특례제한법

▸ 재산가액(1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어업의 경우 가업승계시 배를 쪼개서 일부 세금을 내고 침몰시켜야 ????

▸ 양식어업도 상속이나 증여 후 국가와 공동경영 ????

▸ 영농·어 상속공제 한도가 턱없이 낮아 영농기업의 영속성과 후계농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영농후계인 또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게 영농기업을 상속할 때 최고 15억원 한도에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농민이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자 및 묘목 생산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농기업이 대상이다.

▸ 하지만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각종 농업생산 기반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최근 10여년간 2억원에서 겨우 15억원으로 확대된 것이 전부여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반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같은 기간에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과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 후계농 육성과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을 유입시키고자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민 한사람이 농촌에 정착해 어엿한 농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지 구입비 등 적지 않은 비용과 시행착오를 거치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영농과 생활에 실패해 다시 도시로 떠나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 그나마 가업 승계가 실패를 줄이며 연착륙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농사를 짓는 부모를 보고 성장한 자녀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무엇보다 부모가 선생님이 돼 각종 농업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자식들의 경우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업시설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명 농업의 지속성은 물론 규모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만 실제 수도권의 경우 평당가(3.3㎡·1평)가 100만원을 웃도는 농지도 많다. 최근에는 스마트팜 등 많은 비용을 들여 건립한 시설물도 늘고 있는 추세다.

▸ 가업을 잇는 후계농들이 상속세를 내지 못해 영농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농사를 접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

– 대책

▸ 영농·어 증여, 상속공제 한도 현실화 필요

04 한국광어 양식산업 연합회 이윤수 회장

<30여년전 단순 기르는 어업에서 양식 산업으로 성장>

◇ 생산량: 4만여톤

►2009년 5만톤에서 현재 4만톤 전후 생산

◇ 수익구조: 생산원가 상승으로 수익률 저하

►폐사률 증가 및 생산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

<재도약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물

► 현 재 : 일일 최소 20회전 최대 60회전

ㅁ환수량이 증가 할수록 생산성 향상

► 개 선 : 적정 사용량 연구

ㅁ순환여과식을 통한 스마트 양식으로 가기 위한 방안 모색

<종묘>

► 현 재 : 7-8cm

ㅁ폐사률 증가와 성장률 저하로 생산원가 상승

► 개 선 : 15cm 상향조정 및 백신접종

ㅁ암컷이 성장이 빠르므로 암수 감별이 가능한 시기

ㅁ백신접종으로 위험요소 저하 및 치어로서의 안정성 확보

ㅁ고등동물인 축산 과 비교

<사료>

► 현 재 : 직불제로 참여 유도

ㅁ환경을 빌미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료 강요

ㅁ공익직불제로 범법자 양산우려

ㅁ양어가 및 소비시장의 부정적 반응 지속

ㅁ예산 낭비 및 정부의 신뢰성 실추

► 개 선 : 수익 증대를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ㅁ양질의 배합사료 개발에 예산 지원

ㅁ수익성 제고방안 모색

ㅁ시장상황에 맞게 양어가의 자율적 의사 결정

<백신>

► 현 재 : 효과 미흡 및 예산지원 미흡
- ㅁ백신가격의 부담으로 어병발생 빈도 높고 생산성 저하

► 개 선 : 항체검사 강화 및 예산지원 확대
- ㅁ백신 예산 확대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 ㅁ축산과 동일하게 법적 전염병에는 무료 지원

<원가절감>

► 현 재 : 생존률 저하로 원가 상승
- ㅁ현재 전국 생존률은 50% 내외로 완도가 제주보다 높음.

► 개 선 : 폐사률 저하 및 빠른 성장률로 원가 절감
- ㅁ생존률 목표 80% 이상 되어야 산업의 안정성 제고 될 수 있음.

<자조금 지원>

► 현 재 : 임의 자조금 지원금 규모 미미함
- ㅁ광어 양식업 정부지원 자조금 5억

► 개 선 : 의무 자조금 지원 확대
- ㅁ축산과 비교 시 너무나 빈약한 지원

<외국시장개척>

►현 재 : 원가상승으로 국제 경력 저하

►개 선 : 원가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수급조절>

►현 재 : 원가상승 및 수급 불균형으로 경영악화
- ㅁ생존률이 80% 이상 되어야 수급조절 가능

►개 선 : 적정생산량을 통한 안정된 수익성 제고
- ㅁ업체의 자구 노력과 행정의 지원으로 적정 생산량 산출 및 실행
- ㅁ산업의 안정성 확보

<광어양식 3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생산원가를 절감시켜 국내외 경쟁력을 통한 광어양식 산업의 재도약을 희망해 본다.> 감사합니다.

05 어업회사법인 블루젠 이우재 대표

○ 수산양식산업의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양식대상종의 선택이다. 양식대상종(여기서는 어종)에 따라 그 양식산업의 생리 생태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 어종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어진 자연환경과 시장여건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많은 경우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하거나 혹은 둘 다 고려하지 않고 제3의 요소를 생각하여 어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해당 어종의 양식산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실패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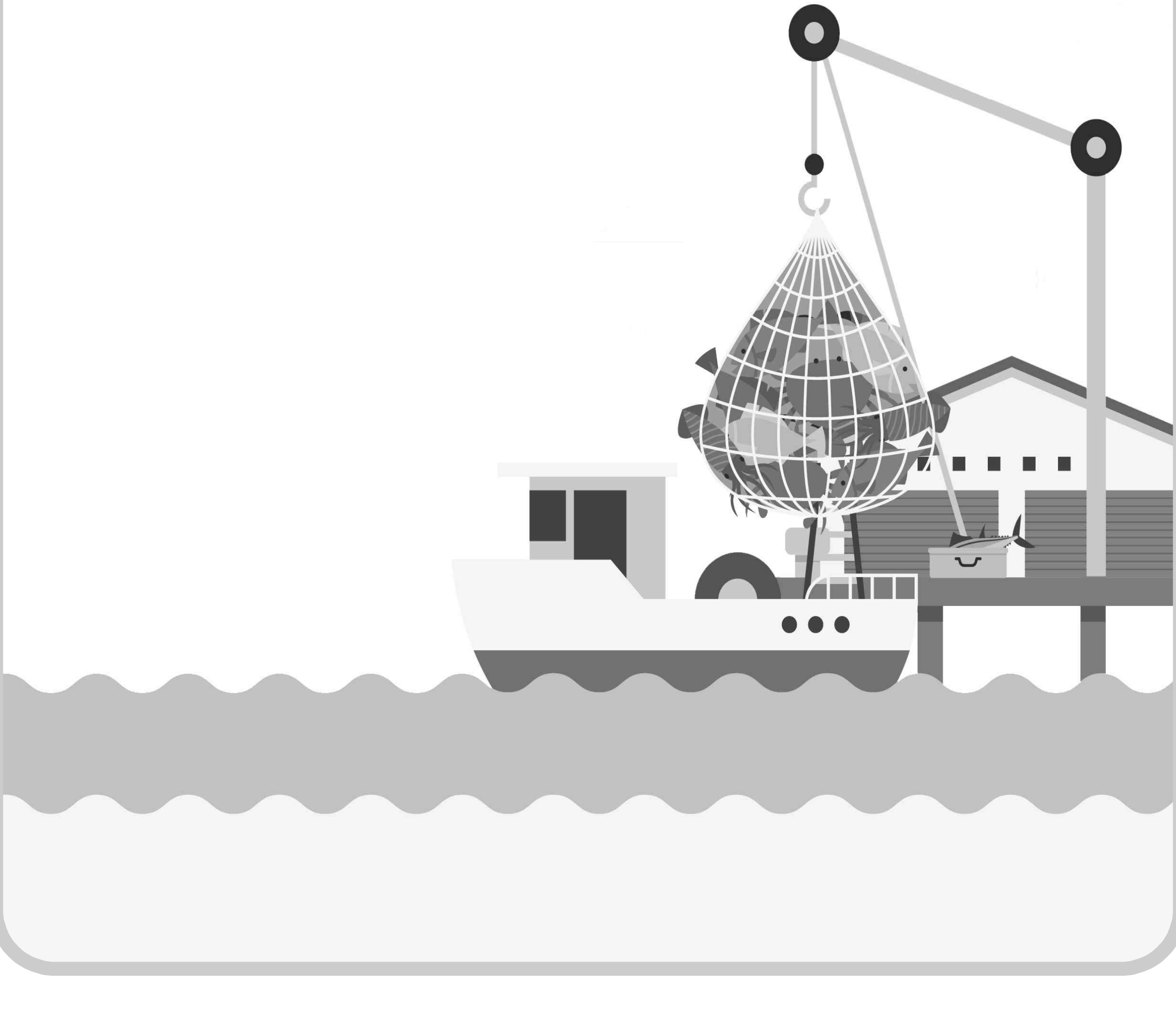
○ 국내 양식산업의 문제점은 정확하게 우리 환경에 맞는 어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은 겨울에는 너무 춥고 (1도)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30도) 그 범위를 극복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적조, 태풍, 냉수대 등 양식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많은 해양환경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양식산업을 지금까지 해 왔고 또 미래에도 지속해야 하는 근본 동력은 시장여건이 어느 나라보다도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수산양식산업이 마주하는 장단점에서 단점을 극복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위에서 언급한 양식산업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상 가두리 양식을 탈피하여 환경을 제어할 수 있고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많은 부정적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육상양식으로 전환이 시습한 과제이다. 여기에는 많은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야 하며 시설 구축에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 영세한 양식어업인들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및 설비의 국산화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 또한 육상양식을 위해서는 해안가에 양식이 적합한 부지 확보가 필수적인데 국내 해안선을 따라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며 기타 위락시설 등이 자리잡고 있어서 부지 확보가 어렵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입 비용 또한 매우 부담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양식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런 기술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극히 어려운 자연환경과 수산양식에 이용할 수 있는 육상면적이 제한적인 상황을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시장에서는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문인력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수산물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식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어촌경제분과 토론문



01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해양레저공간을 이용한 어촌활성화 방안

사람의 이동과 교류를 전제로 하는 글로벌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지난 2020년 5월, 세계관광기구(UNWTO)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관광 분야에서 일자리 약 1억 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글로벌 이동이 멈추었다 해서 모든 여행이 멈춰선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국내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2019년보다 방문객이 늘어난 지역도 있었다. 특히, 방문객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5개 기초 지자체는 강원도 양양군(10%), 경남 밀양시(7%), 인천 옹진군(7%), 전남 고흥군(6%), 부산 기장군(5%)으로,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바다를 끼고 있는 어촌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관광 트렌드가 전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청정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규모 여행’과 ‘힐링 휴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팬데믹 시대에 어촌 지역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자, 힐링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 있는 연안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 핵심에는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핵심으로 한 어촌 활성화가 있다. 코로나19 시대, 청정 휴양 공간으로 어촌이 주목받고 있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최근 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촌 지역의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어항을 어촌지역 해양레저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어업 기능과 관광·문화·레저 기능을 함께 갖춘 ‘어촌관광형 국가어항’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해양치유센터, 해양케이블카 등 어촌관광시설과 함께 레저선박 보관시설을 국가어항시설로 도입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어항별 부지 및 수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다양한 투자모델을 발굴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투자정보를 제공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국가어항에 대해 연 평균 민간투자 700억 원을 유치하고, 연 평균 관광객 5,500만 명을 달성하여 국가어항을 활력 있는 어촌지역 경제거점으로 조성할 것이다.

둘째, 어촌뉴딜300 사업과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구축한 인프라에, 어촌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고유의 문화적 요소와 마을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연안·어촌 지역을 특화, 브랜드화하고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회복과 웰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관광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바, ’22년 해양치유마을 2개소를 시범조성하고 해조류, 머드, 소금 등 바다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어촌마을 해양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이다.

한편, 최근 어촌·어항 지역에 레저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 어민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어항 115개소에 대해서는 레저선박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어항 이용자들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올해 12월 중으로 세부과제와 전략을 담은 ‘국가어항 종합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는 권역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어항을 모두가 이용하는 ‘공유어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세계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이기도 하다. 팬데믹 시기를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주목받은 어촌이 그 인식의 전환을 등에 업고 새로운 관광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야 할 때이다. 연안·어촌 지역의 해양레저관광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께는 힐링을 선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02 권영환 / 강원도 수산인총연합회 회장

어촌살리기 프로젝트
(젊은 어업인이 없고 어촌의 고령화로 인함)

저는 귀어학교 및 귀어센터에서 귀어인들을 위한 현장교육, 맨토, 강의를 하며 젊은 귀어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나 귀어인들이 어촌계가입이 문턱이 높아 힘들다 하여 저희(수산리어촌계)어촌계에서는 귀어인들에게 어촌계 가입을 권유하고 저희 어촌마을에서 3년간 거주를 해야만 어촌계가입이 가능 하였지만 어촌계원들과 협의 끝에 저의 마을로 귀어하는 젊은 귀어인에게는 1년간 어촌계활동을 배움에 기회로 주어 준회원으로 입회를 시킨후 1년있으면 정회원으로 가입토록 정관을 수정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촌에 주거할 집이 없어 차로 2-30분 떨어진 시내에서 집을 구해 새벽에 항포구로 와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골 빈집을 리모텔링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시골도 땅값이 폭등하고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이 많아서 빌리기도 어렵고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어촌에 귀어하려고 마음먹고 어촌으로 오면 실상황은 주거문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촌은 지속적으로 고령화에서 못할 것이며 어촌의 미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론하였으면 합니다.

03 권은정 / 속초청호어촌계 사무장

□ 어촌지역 소멸위기 대응 정착인구 확대방안

○ 2020년 귀어가구 897가구(−7가구), 평균 가구원 수 1.33명(−0.04명), 귀어인 967명(+8명), 동반가구원 230명(−45명)
→ 귀어가구 77.6%가 일인 가구(696가구)

○ 귀어 가구원 1.197명(−37명), 가구주 남성 68.8%, 귀어인 967명 중 625명이 남성(64.6%), 평균연령 52.8세(귀어인 60.8%가 50~60대),
→ 귀어가구 69.6%가 1인 남성가구(624가구), 즉 귀어가구 70~80%가 50~60대 1인 남성가구로 추정 가능.

○ 귀어가구 동반가구원 유입 방안, 청년귀어인 유입 방안, 여성귀어귀촌인 유입방안 등 모색. 특히 여성귀어인에 대한 혁신적 정책 전환이 필요. 귀어의 정의와 귀어 인정 범위에 대한 유연성.

○ 수산업(어선, 양식) 중심의 귀어귀촌 정책에서 탈피 어촌 이주 및 정착 인구 확대

□ 열린어촌마을(어촌 개방성 확대)

○ 귀어인 수용 등 개방도 높은 어촌에 국가지원사업 우선 지원

○ 개방의지가 강한 어촌의 경우 국가항 등 규제완화, 가점방식의 우선지원책→지원대상지역을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ex: 어울림마을 고도화사업 등 가산점 부여)

○ 국가지원사업 기존 수혜지역(뉴딜300,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중장기 지원정책) 추가지원 요건에 귀어인 수용 및 개방 전제.

□ 어촌지역문화 활동가 제도 신설 및 지원정책

○ 어촌계 사무장 확대−단순 사무행정 인력 확대가 아닌 어촌지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어촌체험 및 어촌관광 컨텐츠를 지역사회로 확장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 어촌지역문화 활동가를 통해 어촌 중간지원조직과 어촌마을의 소통을 담당, 지역사회 내 시민활동가 조직과 연계하여 관계인구 확대의 매개자 역할.

○ 갯벌, 레저 등 유사한 체험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스마트관광, 가이드 투어, 해양환경캠페인 등의 다채로운 활동. 지역 내 DMO조직과의 연계, 숙박, 체험, 문화 등이 어우러진 프로젝트 관광컨텐츠로 확장.

○ '어촌'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바다, 연안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지역 내 시민활동가 및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관계인구 확대를 모색.

○ 수산물 소비, 획일적인 체험프로그램에서 컨텐츠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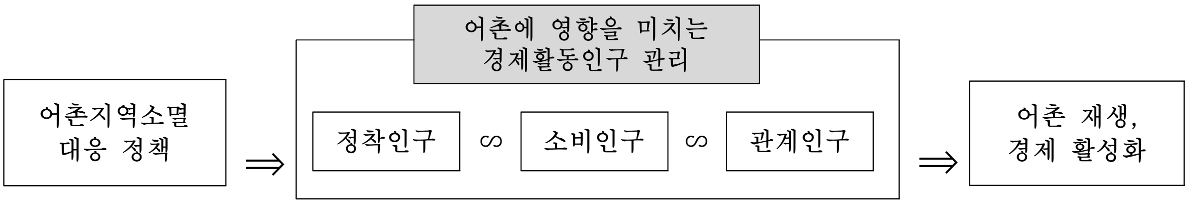
○ 어촌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공익적 기능을 알리는 역할. 어촌마을해설사, 어촌마을스토리 텔러 등(ex:제주해녀문화해설사)

04 나승진 /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

□ (정책 방향) 출산률 저하, 고령화 등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속에서 어촌지역 소멸 위기 대응은 **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인구를 관리하는 관점**에서도 방향성 필요

○ (정책목표) 경제활동인구 관리는 (가칭)**지역재생지수**로 **'정착인구'**와 **'소비인구' 그리고 제3의 인구인 '관계인구'**까지 유지·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수요 발굴

○ (정책수단) (가칭)지역재생지수별 어촌재생에 필요한 **지역별 특화되고 집중화 된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강화,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경제조직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



□ (정착인구) **어촌의 창업·취업 지원 및 주거·소득기반 강화를 통한 정착인구 확대**

○ (귀어창업) 양식업권의 공공형면허·공공기관 임대차제도 신설, 귀어업인 신규면허 우선권 부여, 어촌계 행사계약 범위 확대, 양식퇴직연금제 및 직불금제도 활성화 등

○ (어촌개방) (현) 어촌계원 자격 里단위 거주자 제한 등 장벽 → (개선) 面단위로 확대(준계원), 가입비 완화 / 귀어인 등 개방도 높은 어촌 우선사업 지원 등

○ (고용장려) (현) 어업창업자 청년어촌정착금, 어선청년임대사업(정부신설) → (개선) 양식·어선 및 유통·가공업의 취업자 고용장려금, 청년 어촌비지니스 창업지원금 신설

○ (주거개선) 귀어인의 집(임시주거), 빈집 리모델링(귀어 임대), 주거플랫폼사업(국토부 협업), 지자체 공동 자체주거지원사업, 어촌형 생활서비스 거점센터 추진

○ (소득기반) 소규모 항포구(1,267개) 등의 어업기반 및 어업외소득기반 시설 정비, 기항지 개선, 국가어항의 유휴부지·수역의 민자유치(친환경 스마트양식, 종자생산, 해양치유·명상원, 리조트 등)를 통한 어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기반 강화

□ (소비인구) 어촌의 체험·숙박·음식 및 여행 등 활성화를 통한 소비인구 확대

○ (체험 촉진) (현) 그간 체험마을(118개)은 어업외소득을 견인('19년: 연 300억→ '20년 170억), 단순체험 유사(61% 갯벌), 20년 경과되고 낙후 → (개선) 관광수요에 맞는 특화개발, 브랜드화 및 코리아둘레길 연계 정비, 관리지역내 숙박·공동식당 금지규제 완화 등 관광인구 확대

○ (식품 소비) (현) 주로 수산물 원물 위주 판매 → (개선) 변화하는 국민 식문화에 맞는 간편식 수산식품(HMR)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 수산식품의 소비인구 확대

○ (교통 관광) 섬·연안의 수상관광택시 및 도서 내 공영관광택시 등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 개선 및 교통관광 활성화(유인도의 무인화 방지, 일자리창출로 정착인구 확대)

□ (관계인구) 어촌과 지속적 교류관계에서 이주 및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인구 형성

○ (방향) 관계인구 정책대상 발굴·육성 → 관계인구관리 정보플랫폼 운영 → 지역 교류 및 체험형 관계인구 유치·촉진 → 지역체류 활동 만족도 및 이주 가능성 제고

○ (관광체험) 생활관광체험, 일자리체험, 귀어체험, 비대면 어촌체험(체험키트 및 교육교재 등) 등 운영을 통한 관심유도 및 확산

○ (지원활동) 고향사랑 기부 및 지역특산품의 답례품 활성화(「고향사랑기부금법」('23.1.1 시행)), 정부-기업-학교-어촌 자매결연 및 협약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활동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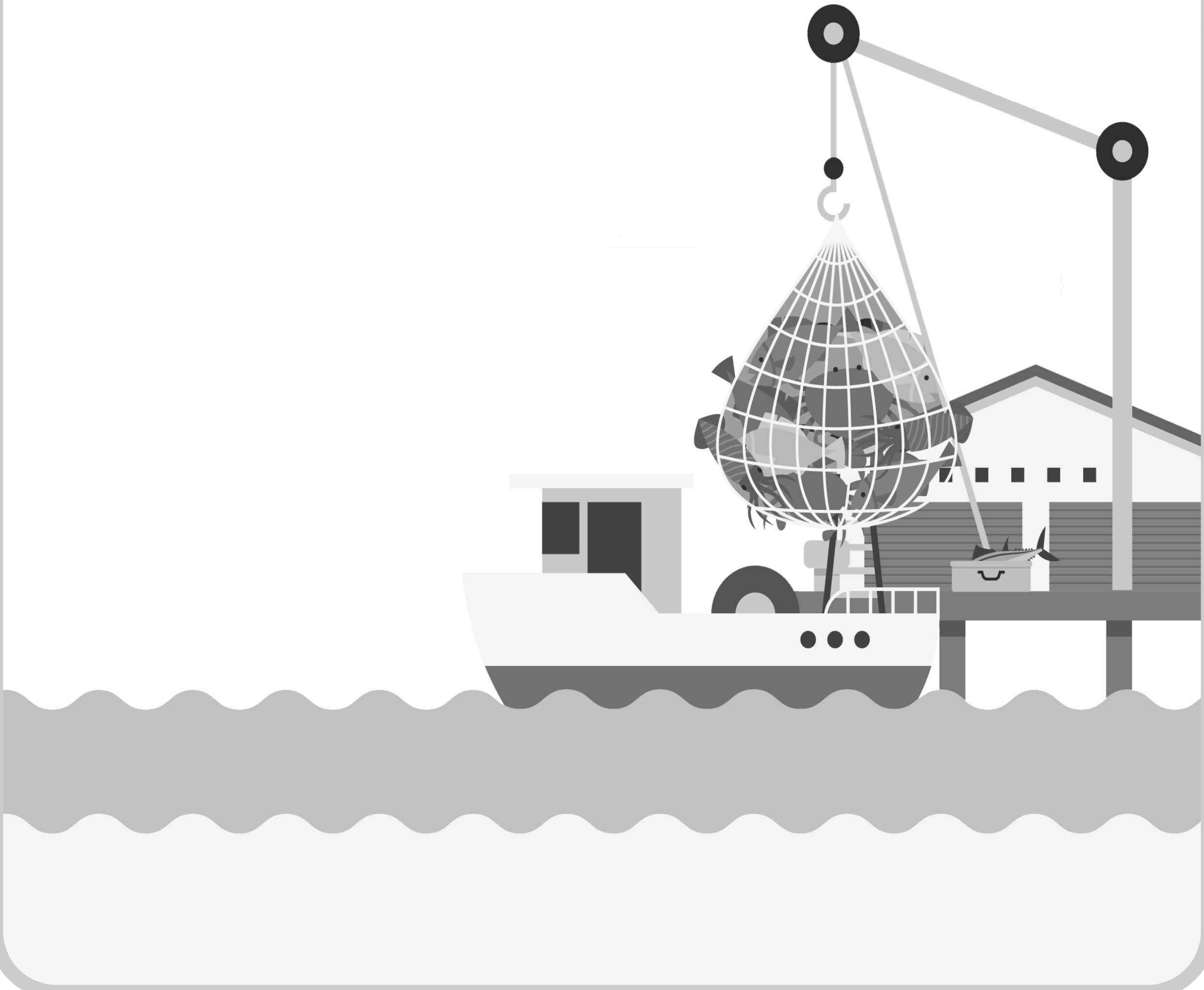
○ (투자활동) 어선·양식·어촌비지니스 창업 및 민자어항 개발 등에 투자(크라우드펀딩, 자산투자펀드, 개발투자 등)를 통한 자본조달 다각화 및 관계 형성(이익배당, 주말양식장, 생산품 할인, 이주시 준귀어인 지위 등 부여하여 정착인구로 유도)

○ (협동활동) 어촌체험마을, 스마트어촌, 탄소중립마을, 경제활동지원시설(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상업적 공간 등), 생활서비스센터 등 경영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운영이나 개발에 어촌계와 지역활동가, 자원봉사자 등과 협동활동(SPC, 경제조직화 등), 사무장 확대,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통한 관계인구 확대

○ (외국인 인력) 어촌지역 어선 및 양식장 등 수산분야 내국인 근무기피로 외국인력 의존도 높은 실정,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E-9)와 외국인선원제(E-10)를 통해 수급 중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입국 제약으로 인력난 호소 → 단기 국내 어촌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계인구로 관리하여 어촌으로 귀화 또는 국내 혼인장려 등 지원을 통해 국내 정착인구로 유도하고 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안정적 확보

* 수산분야 외국인근로자 수(비중) : ('17) 22,523명(16.4%) → ('18) 25,401명(18.8%) → ('19) 27,723명(20.3%) → ('20) 26,495명(20.1%) → ('21.6) 25,612명(18.9%)

4. 어촌삶의질분과 토론문



01 김용식 /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

□ 수협 어촌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 **'22년 어촌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예산
총 계	7,958
ㅁ어촌 활성화 및 어촌계 육성	451
ㅁ어업인 복지향상 및 교육지원	1,747
ㅁ여성어업인 역량제고 및 도시·어촌 교류 촉진	1,756
ㅁ수산자원 조성 회복	1,111
ㅁ바다환경 유지개선 및 개발행위 대응관리	1,020
ㅁ수산제도 개선 및 어업피해 보상지원 등	323
ㅁ어업인 의료지원 등 (수협재단)	1,550

○ **문 제 점**

– 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범정부적 정책추진**과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 필요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촌계 운영을 위한 관련법규 개선 필요

□ 건의사항

[어촌계 지도·감독 강화]

○ 실효성있는 어촌계 지도감독 기반 마련을 위한 어촌계정관 변경 인가권자 변경 및 어촌계 제재 근거 수협법 규정

○ 효율적 어촌·어업인 통계 산출을 위한 용어(어업인, 어가인구, 수산인 등) 재정립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관리]

○ 경영이양직불제 등 수산공익직불제도 개선*을 통한 어업인 지원 확대

* 경영이양직불제 : 지원금액 및 지원연령 확대, 수산자원보호직불제 : 지원 대상 및 단가 확대 등

○ 수산자원 남획방지 및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법규 재정비*

* 마을어업 어장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및 낚시어선 어획량 제한 등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어촌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 SOC서비스(보육·의료시설 등) 대폭 확충

○ 어촌마을 환경정비, 육·해상 오염 방지 등 친환경 어촌·어항 조성 추진

02 남수민 /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장

❍ 수산·어촌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이니만큼 지금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향후 마련되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촌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서는 어촌에 산다는 것이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이 되어야 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어업인·어촌 삶의 질 시행계획은 도시와 비교하여 분야별 어촌의 낙후도를 인정하고 삶의 질을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향후 삶의 질 관련 정책은 도시보다 높은 만족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 첫째, 구체적인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촌의 경우 고령인구가 많은 만큼 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가장 열악한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일 것입니다. 실례로 도시의 1, 2차 상급병원을 다니는 것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예약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고령화된 어업인에게 상급병원 진료는 꼭 필요하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반면, 코로나로 인해 가장 급속하게 발전한 영역이 영상회의 분야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최초 진료는 상급병원 방문을 통해 실시하고 추후 정기적인 약 처방 등은 지역 내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의료진 관할 하에 화상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어촌지역 보건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통 등이 취약한 어촌, 그 중에서도 특히 도서지역에 비대면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삶의 질 정책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 어촌지역 거주자라고 하면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존 교육문화 부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계열 우수 재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지원사업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일 것입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해양수산계열 재학생의 교육 및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 구입비 등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 등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셋째, 규제 완화를 통한 정책대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귀어귀촌정책은 광역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도 어촌은 존재하며, 도시 어촌이라고 해서 어촌소멸지수가 낮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촌의 존폐위기를 대비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어업을 위한 귀어귀촌이라고 한다면 굳이 제외하기보다는 어업인의 절대수를 유지시키기 위한 영역의 확대 또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 박준모 /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삶의 질’은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 척도이자 요건이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 받지 않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 확보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삶의 질’은 간단하게 정의되지 않는다.‘삶의 질’은 물질적인 측면(의, 식, 주, 건강 등)과 정신적인 측면(즐거움, 행복감, 만족감, 친밀감 등)이 있다. 사람마다 어떤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만족을 느끼는지가 다르므로 삶의 질을 예측하고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와, 안전·자유 및 권리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안은 정신적인 측면이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에서 추진된다. 이는 의, 식, 주, 건강 유지 등의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촌 삶의 질 향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촌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어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은 ①정주여건 개선, ②복지서비스 향상, ③교육·문화 SOC 지원, ④어촌의 경제적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읍면 소재지에 각종 생활서비스와 집적된 복합거점 인프라 확충, 귀어·귀촌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서지역 교통편의성 제공, 어촌공간계획제도 도입 등이다. 둘째, 복지서비스 향상 분야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취약지역 해소, 주민 편의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문화 SOC 지원) 어촌지역 학교시설 개선, 학교 간 연계 교육 강화 등 학생 복지 증진, 노인층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한 평생교육 인프라(지역문화복지센터 등) 확충 등이다. 넷째, 어촌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어촌기반 융·복합산업 고도화,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의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어업기업, 영어조합법인 등) 활성화 등이다.

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지자체)의 지원 뿐 아니라 어촌 주민이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스스로 발전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수행하고 실행은 지역사회가 담당하는 어촌형 로컬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촌형 로컬 거버넌스 모델은 지자체, 지역협의체, 사업실행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어촌지역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결정한 이후에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기반으로 사업실행기관이 사업을 실행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부(지자체) 주도형 사업은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문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어촌형 로컬 거버넌스 모델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주민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04 박현규 /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장

○ 수산업·어촌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은 공익적 성격으로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수산업·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한 바다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 바다에서의 밀입국, 밀수, 영해침범, 외국어선 불법조업 등 주권과 치안을 위협하는 사건의 발견·통보 등 국경감시 기능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전에 공헌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음
- ▸세월호 사고 직후 자발적 인명구조는 물론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이용한 야간수색 동참 등 해난구조
- ▸태안 유류유출 시 방제활동과 환경 모니터링
- ▸속초 앞바다 간첩선 최초 발견 신고 등
- ▸거대한 감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전에 공헌하고 있음

○ 이러한 어촌에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어촌이 2045년 되면 81.2%가 소멸 고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
- ▸소멸 원인을 살펴보면

○ 첫번째 어촌사회 소멸의 원인은 삶의 질 만족도가 낮기 때문

- ▸따라서 어촌사회 지역소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

○ 두번째는 교육과 의료 등 인프라 부족이 삶의 질 저하와, 도시민들이 어촌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

○ 세번째는 섬 지역 같은 경우 해상날씨 영향으로 인한 잦은 결항율과 기항지 부족 등 해상교통 사각지대 또한 원인 중 하나

○ 어촌사회 지역 소멸 원인을 종합하면

- ▸어촌주민 이탈요인과 청년층의 기피요인 1순위는 일자리 부족과 수산업 여건 악화이며,
- ▸도시민의 어촌이주 기피요인과 청년층의 어촌비유입 1순위 역시 일자리 부족과 교육, 교통 인프라 부족

○ 미래 수산비전과 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준비가 필요

- ▸코로나 19의 습격은 수산업와 어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오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수산업과 어촌을 낡은 것으로 보는 생각은 뉴노멀 시대에 이제는 버려야 할 오래된 습관 중 하나

▸ 버려야 할 것→(GDP 비중 낮다, 일자리 중요하지 않다, 노인들만 있다)

○ 코로나 이후 한국 수산업과 어촌의 삶의 질 개선 나아갈 길은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혜택을 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어촌과 어항을 스마트하게 리셋하여 활력을 회복시켜야 함

○ 삶의 질 개선 우선 순위를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

▸ 일하는 방식 개선, 삶의 질 향상, 환경개선 등의 순

▸ 어업작업 스마트화, 정주여건 개선

○ 어촌사회에 필요한 삶의 질 스마트화 전략은 세 가지로 구분

▸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누구에게나 손쉬운 어업

▸ 신재생,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문화와 의료, 원격교육 서비스 등 ICTs 기반의 생활환경 개선

○ 뉴노멀 시대에 수산업과 어촌이 "줄어드는 수산업, 사라지는 어촌" 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혜택이 어촌에서 향유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어촌을 스마트하게 '리셋' 할 수 있는 골든타임

05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21년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

○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제4차 기본계획(‘20~’24)에 따라 21개 부처·청이 추진 중인 과제를 종합하여 시행계획 수립

○ (**투융자**) **4대 부문 173개** 과제 중 **해양수산부**는 **31개 과제**를 추진 중이며, ‘21년 **1조 3,754억원** 투입

< 해양수산부 추진과제 >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 8개 과제 1,662억원	후계 인력 장학금 지원 1개 과제 1억원	어촌뉴딜 300 등 13개 과제 10,248억원	수산창업투자 지원 등 9개 과제 1,843억원

※ 각 사업별 투융자 금액은 국비, 지방비, 민간 등 기타금액을 합산한 총액임

■ **보건복지 부문** (8개 과제)

– 어업인 안전망 구축 및 예방적 건강서비스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작업 안전 교육 및 예방장비 개발보급 지원, 어선사고예방 지원 등

■ **교육문화 부문** (1개 과제)

– 해양수산계열 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지원

■ **정주기반 부분** (13개 과제)

–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연안여객선 현대화,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 운영,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어촌뉴딜300, 어항시설안전관리, 해양폐기물수거·처리개선,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갯벌생태계 복원, 친환경 양식 에너지 보급, 수산직불제, 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 등

■ 경제활동 부분 (9개 과제)

– 어업인, 어촌 소득기반 강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수산물 유통체계개선, 어촌 및 해양 관광활성화, 청년어업인 후계영어자금, 귀어귀촌지원, 스마트 양식장 클러스터 조성,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추진,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 여건 및 방향

○ (**여건**) 인프라 개선과 함께 **소득, 복지** 정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 중이나, 여전히 **도시·농촌에 비해 생활 여건 미흡***

* 삶의 질 만족도(KMI 조사) : 어촌 3.9점 〈 농어촌 5.1점 〈 도시 6.3점

○ (**방향**) 어촌·어업인 **복지 및 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업인의 수요에 맞는 **보건·의료, 문화, 편의 증진 사업** 추진 필요

□ 정책 제안

○ **어촌 공간 개념 정립**

–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어촌과 농촌의 공간적인 분리가 되지 않아 중복 투자 등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어촌의 공간적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특히 섬 지역의 경우 육지와 달리 정주 여건이 기본적으로 다르므로, 육지 어촌과 섬 어촌을 구분할 필요

○ **어업인·어촌 복지 실태조사 개선**

– 어촌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촌·농업 위주로 어촌·어업인 조사 표본이 적어, 어촌부분의 삶의 질 실태 파악 및 활용 곤란

– 전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항목·방법 등 확대·개선 필요

○ **어업인 복지 신규사업 발굴 및 홍보 강화**

– 어업인의 문화·예술 복지 공백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필요

– 어업 현장에서는 복지정책 및 사업을 모르는 어업인이 많아 다수의 어업인이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안내서 배포, 반상회 등을 활용 필요

06 하두식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장

□ ’20년 어가인구는 97천 명으로 5년 전 128천 명 보다 24.4%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6.1%로 5년 전보다 5.6% 증가, 생산기반 약화로 어촌활력 제고에 한계, 어촌 삶의 질 저하 등으로 ‘45년에는 약 81%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전망

* 어가인구/65세이상 : (15) 128천명/39천명(30.5%) → (20) 97/35(36.1%)
* 지역소멸지수(KMI) : 어촌(0.303)은 농촌(0.341), 도시(1.208)에 비해 낮고‘45년에 81%가 고위험지역 전망

□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소득 향상을 위해 어촌뉴딜300, 직불제, 첨단양식어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어가소득 정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어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

* 어가소득 : (15) 44백만원 → (17) 49 → (19) 48
* 수산직불제 :‘20년부터 4가지 형태로 도서 및 접경지역에 70만원 지원

□ 어촌 활성화와 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확보를 통해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 직불제, 스마트어업 등 수산부문과, 어업 외 소득과 복지 등 비수산부문의 정책도 병행되어야 어촌·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어촌소멸 방지 및 어촌활력 제고로 어업소득 증대방안으로, 젊고 유능한 어촌·수산업 후계 인력 및 어업종사자 신규 유인정책을 과감하게 개선

* (신규인력) 어촌 정착과 수산업 창업에 필요한 비용과 지원조건을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
* (고령인구) 안전하고 손쉬운 작업환경 조성 등 신규 일자리 창출
* (외국인근로자) 입국자 수 및 체류기간 확대, 어업(어촌)형 이민제도(20~30대 부부) 도입

○ 안정적 어가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지원대상과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

* (현행) 선택형(자원보호, 경영이양 등) + 기본형(조건불리) → (개선) 선택형(해양영토, 안전, 환경, 전통문화 계승 등 추가) + 기본형(모든 어업인과 어업종사자로 확대, 지원단가 상향)

○ AI·ICT 등 첨단기술 도입 등 스마트 양식어업 육성으로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로 어촌 정주환경 개선과 에너지 자립 지원 필요

○ 어업인 연금제도 신설 등 제도 마련으로 어촌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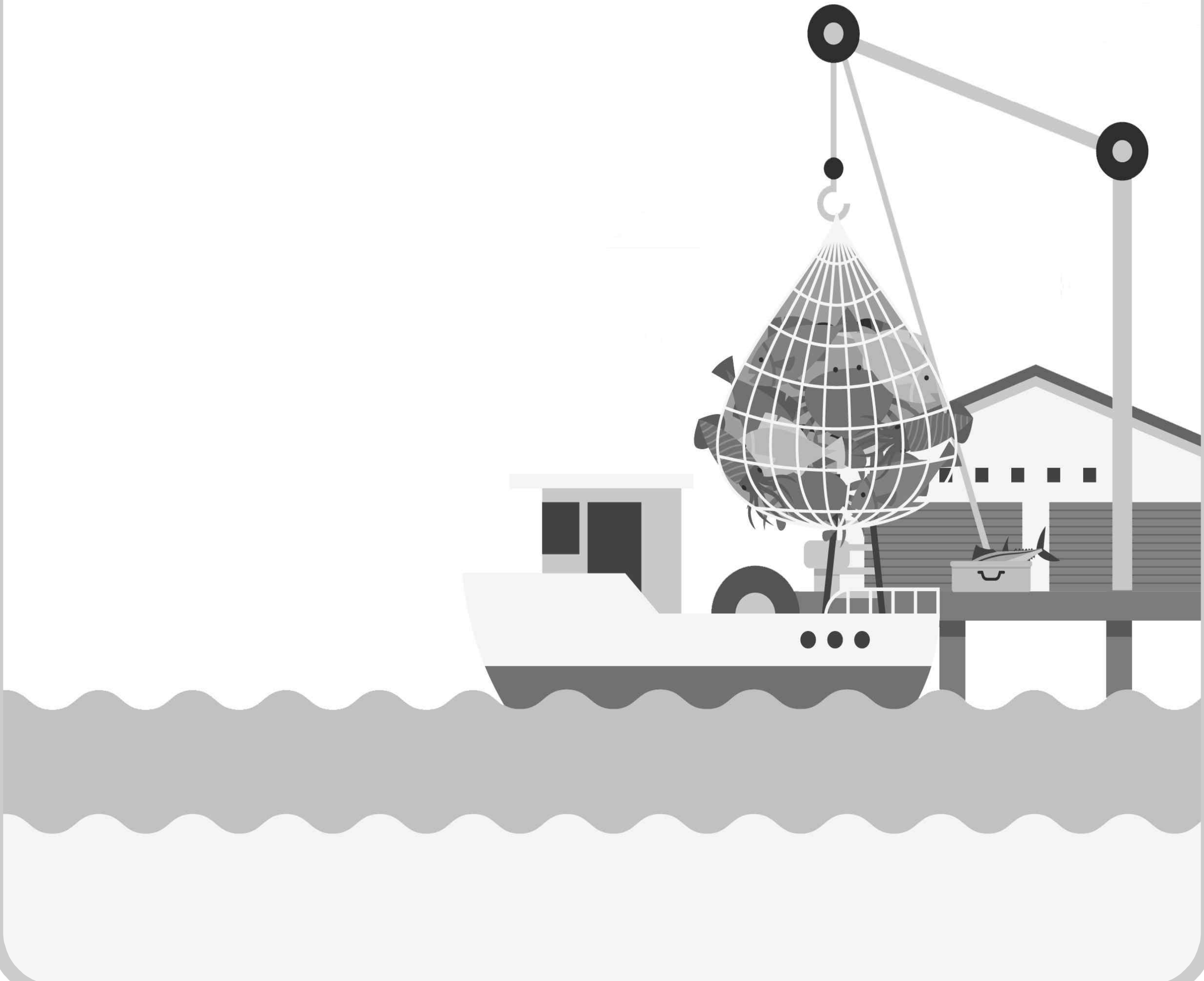
○ 어업의 구조적 한계 극복, 어촌 융복화 산업 및 국민 여가생활 다양화 등 감안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

* 例) 어촌체험휴양마을, 어촌관광, 해양레저,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해 어촌의 가치를 극대화 필요

□ 따라서, 어촌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정부합동대책‘을 마련, 체계적으로 추진 필요

* (현행) 해수부, 농식품부, 행안부, 국토부 등 개별 추진으로 사업효과 감소 → (개선) 정부합동대책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5. 수산물소비분과 토론문



01 김경필 / 수협 판매사업부장

□ 수산물 소비 현황

○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소비패턴 급격히 증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위주에서 인터넷·홈쇼핑·모바일 쇼핑 등 **온라인 판매** 추이 확대

○ **(수산물 소비 위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증가로 소비 위축 실정

□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지원 필요

○ **(소비촉진 사업 지속)**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추진으로 매출 확대 효과, 어업인 소득 향상 및 어가지지를 위해 정부의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속 필요

> **※ 본회 수협쇼핑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추진 현황**
> ○ **(수산물 매출 확대)** 사업 미실시 전년 동기간 대비 수산물 매출
> '20년도 210%, '21년도 107% 증가
> * 사업실시 비교 기간 : ('20년, '19년) 8.1 ~ 11. 30, ('21년,'20년) 1.1 ~ 6. 30
> ** '20년 하반기부터 정부 지원 사업 본격화

○ **(생산자 지원 효과 반감)** 자본력을 앞세운 민간 대형 온라인몰에 집중된 지원으로 생산자에 대한 지원 효과 반감

* 온라인 15개 업체 중 11번가, 쿠팡 등 대형몰 7개 업체에 전체 예산의 75% 지원('21년)

○ **(민간 대형온라인몰의 시장 지배력 남용)** 대형 온라인몰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납품 단가 인하 압박에 어업인이 무방비 노출되어 온라인시장 진입 한계가 있음

○ **(생산자단체 지원 지속적 필요)** 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추진으로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수익이 어업인에게 환원되는 사업 필요

– '공공형 수산 통합 온라인 플랫폼'은 어업인 지원을 위해 타 온라인몰과 다르게 국내산 수산물만을 취급하여,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 정부의 지원 및 관심 필요

02 심길보 / 부경대학교 교수

수산식품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 입장에서 오늘 행사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수산물 소비」라는 주제를 토론주제로 받고 수산물의 소비를 어떻게 바라볼것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소비자 중심으로 산업이 변화하는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기후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외부환경이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로 볼 때, 수산물 소비는 생산에는 현재의 성장 동력을, 산업은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생산–소비–산업 융합이 자생력을 가진 선순환구조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비변화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어려움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양식산 조피볼락, 양식산 넙치 산업은 소비저하와 맞물려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밀키트, 가정간편식 등 소비 트랜드를 맞춘 유통 구조 변화와 신제품 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두 번째, 원물중심의 수산식품산업의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통계를 살펴보면, 수산가공품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2020년 작년대비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형수산물의 생산량은 29.7% 증가했지만, 생산금액은 -12.4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처리한 동결수산물에 의존하는 수산산업의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발표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수산식품산업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행이 최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포, 부산의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0년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매년 증가
전국: 1,085,522톤(2019)→1,305,415톤(2020), 전년대비 16.2% 증가

2020년 수산가공품 생산금액은 매년 증가
전국: 6,063,543백만원(2019)→6,220,074백만원(2020), 전년대비 2.6% 증가

2020년 원형동결품 생산량 매년 증가
전국: 268,052톤(2019)→347,559톤(2020), 전년대비 29.7% 증가

2020년 원형동결품 생산금액 감소
전국: 1,371,302백만원(2019)→1,200,158백만원(2020), 전년대비 -12.4% 감소

세번째로 정책포럼 활성화 및 혁신기술개발 협의체 구성 필요합니다.

최근 저널 ‘네이쳐’ 에서 수산물을 블루푸드로 선정할 만큼 환경과 영양적인 측면에서 미래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수산물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식량자원으로 세포를 배양하여 생산하는 배양육이나 식물성단백질을 이용하여 동물성단백질을 대체하는 대체육 등 4차산업혁명기술은 선큼 우리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산식품 산업은 여전히 영세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도에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미래를 향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과 미래지향적 기술발전을 위해 준비해야 될 현안사항을 나누어, 현재와 미래에 필요로 하는 정책과 기술을 논의할 수 있고 하나의 목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의 안전성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수산식품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외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①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출이 해수·해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②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③아울러 정부는 일본과 주변국 및 국제기구 등과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④이 채널을 가동하여 오염 처리수 처분에 필요한 국제 기준을 지키고, 오염수의 방출 전 오염 처리수 분석 결과를 국제기구와 이해 당사국에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⑤마지막으로 정부는 수입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역 강화 및 주기적 원양어업 지역의 방사능 측정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COVID-19 **인터넷 직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 수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거래 방식이 코로나19로 새롭게 주목
-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법률적 규정 조항 없음.
  - 농산물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을 2015년에 제정해 운용

오늘 추진되고 있는 원탁토론이 미래 혁신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수산식품산업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03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급 관리 등 >

Ⅰ. 2021년 주요 성과

□ 코로나19 장기화 및 후쿠시마 이슈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에 선제적 대응

○ (**소비 활성화**) 상생할인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20, 210억원 → ’21, 590억원)하여 소비부진 품목 등에 대해 **20~30% 할인** 추진

– 총 10회 행사 완료하였으며 **총 2,034억원***의 매출 실적 달성

* 9회 행사 정산 기준(‘21.11월말)

○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어업인 상생 강화 등을 위해 전통시장 대상 온라인 상품권 발행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 (**온라인 상품권 발행**) 제로페이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20% 先 할인된 상품권 **약 80억원 발행**(‘20, 3억원 → ’21, 80억원)

–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전국 34개 시장, 2천여개 점포와 협업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30%) 행사 **신규 추진**(‘21, 30억원)

□ 추석 물가 안정 등 수급 관리 강화

○ (**수급 동향 점검 강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수산물 수급 관리 민관협의체**’ 구성, 소비자 체감 물가 점검

* 생산자(수협중앙회), 전통시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업계(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비자(소비자연맹) 등

○ (**수급 관리 강화**) **정부 비축사업**(‘20, 705억원, 1.3만톤 → ’21, 1,005억원, 1.9만톤) 및 **민간 수매융자 지원 사업**(’20, 509억원 → ‘21, 719억원) 확대 등을 통해 수급 조절 기능 강화

– 추석 집중 물가 관리를 통해 수산물 성수품 6종의 평균 가격이 추석 기간 **△18.8% 하락**(9월 16일 기준, 8월 30일 대비)

* 정부 비축 물량(최대 9,227톤)에 대해 최대 30% 할인방출(기존 4~17% 할인), 상생할인 행사 할인율 상향(20→30%)

□ 온라인·비대면·직거래 등 新 유통망 강화

○ (**로컬기반 구축**) 로컬매장 내 수산부문 입점 지원을 **권역별로 확대**(‘20, 충청권 10개소 → ’21, 호남권 10개소)하여 안정적인 지역 생산 기반 구축

* 기존 농축산물 위주의 직거래 매장 내 수산부문 입점을 지원하여 별도 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절감 및 소비자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

○ (**비대면·온라인 판로 지원**) **공영홈쇼핑** 입점 희망업체에 **수수료 지원**(연 45건) 및 영세어업인의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연 60건)으로 비대면·온라인 진출의 진입장벽 완화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수산물 온라인 판매 희망 생산자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거래지원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착수('21, 3억원)

* 다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제품등록, 주문·재고 및 배송 관리 등 입고부터 판매까지 판매경로 전반의 관리가 가능한 온라인 거래 원스톱 지원 체계

Ⅱ. 2022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 공공 급식 확대를 통한 소비 창출

○ (**학교 급식**) 국내산 수산물 공급 확대 및 수산물 선호도 증대 등을 위해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 지자체 수산물 식자재 공동 구매, 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등 검토

○ (**군 급식**) 군 장병 대상 「**수산물 소비 촉진 프로젝트**」 구상

– 영양사, 조리병,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메뉴 선호도 조사**, 단체 급식 **레시피 개발**, **쿠킹클래스 실시** 등 프로그램 확대

○ (**바우처**) 연령대별 수산물 적정 섭취량, 저소득계층의 수산물 부족 실태 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시범사업 로드맵 수립**

(참고)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농림부)

▶ 사업규모 : '20년 35억원, '21년 89억원
▶ 사업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지원품목 :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흰 우유, 계란, 잡곡, 축산, 꿀('21년 기준)
▶ 지원금액 :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4인 8만원 등)

▶ 대상지역 : '20년 4개소(세종시, 김천시, 완주군, 청양군), '21년 10개소(거제시, 김제시, 당진시, 밀양시, 괴산군, 문경시, 예천군, 청양군, 평창군, 해남군)

□ 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물가 안정

○ (**위기 관리**) 후쿠시마 이슈 등 대외적 충격, 대규모 해양 재난 발생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산물 수급 위기 관리 매뉴얼**' 마련

- 위기 발생 시, 긴급점검회의 결정으로 할당관세 물량 조기 수입*, 민간 수매 물량 방출 명령 등을 **탄력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예) 고등어는 대형선망수협이 할당관세(0%) 물량 500톤 보유(일반 관세율 : 노르웨이 기준 10%)]

○ **(정부 비축) 위판장 위생관리 실태, 수산물 이력제 참여실적** 등을 감안하여 **비축물량을 배정**하는 등 사업체계를 개편('22)하고, **적정 비축 규모를 산출***('22)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비축량 : '21, 소비량의 1.9% → '25, 3%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성과관리 강화)** 소비자 물가 안정 등 **정부비축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22)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 **(민간 수매)** 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실시한 수매 실적 점검** 등 민간 수매 융자 지원 사업 개선, 민간의 수급 조절 대응 능력 강화

□ 온라인, 직거래 판로 확대

○ **(온라인) 생산자 거래지원 플랫폼 구축**(~'24)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온라인 거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어업인 컨설팅 강화****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1~'22, 3억원) → 플랫폼 구축('23~'24, 17억원)

** 위판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첨부 등 효과적인 방식 안내(연 60건, '22 4.5억원)

○ **(직거래)** 로컬매장 입점 지원을 **영남권·제주권**으로 확대, '**우수 직거래 생산자**'를 선정하여 생산-유통-판매별 **노하우 및 성과** 공유

* ('20) 충청권 10개소 → ('21) 호남권 10개소 → ('22) 영남권·제주도권 10개소

○ **(제도 개선) 수산물 직거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직거래 개념을 명확화하고, **법적 기반 마련** (「수산물유통법」 개정, '22)

* '21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KMI, '21.1~12, 1.3억원)

□ 수산물 이력제 개편을 통한 참여율 제고

○ **(관리시스템 개편)**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생산정보를 중심**으로 **수협**이 **이력정보를 일괄 입력·관리***토록 하고, **유통정보는 비공개**** 추진

* 수협 위판 정보시스템과 수산물이력제 정보시스템을 연계('22, 1.5억원)

** 식품사고 발생 등에 대비, 거래명세서를 통한 추적·회수가 가능토록 관리('22, 「수산물유통법」 개정)

○ **(정보 제공방법 개선) 정부**는 표시방법, 필수정보(생산자, 위판장, 위판날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최종 판매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되, **상세정보의 공개유무 방법 등은 자율판단**

○ **(단계별 참여) 대형마트** 등에 우선적으로 新이력제를 도입하고, 이와 동시에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의 **이력제 참여도 유도**

○ (**인센티브 제공**) 정부비축, 민간수매 지원 시 **유통·가공이력이 표시된 이력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 (**이력제 관리역량 강화**)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이력감시원**' 제도를 신설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 도입 검토

0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

1 수산식품클러스터 개요

□ **(개념)** 권역별 수산업 특성에 맞춰 **직접 가공** 및 **R&D·수출** 등 **복합 기능**을 갖추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산업지원 인프라**

ㅇ 수산식품 수출가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당 권역에 집적된 수산 식품산업체, 기관, 연구소, 대학 등의 집합을 의미

□ **(추진배경) 영세한 수산식품기업** 역량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코로나-19**,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 필요

□ **(추진방향) 권역별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주체들을 **연계**하여 수출전략 및 트렌드 맞춤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주요기능)** ① **수산식품 가공기업** 대상 ② 실용화 R&D·기업육성 ③ 수출 지원 등 **산업 지원** **기능** 수행 ④ **권역별** 수산식품산업 **네트워크 구축**

ㅇ **각 권역별** 기존 가공·유통시설 및 어업·양식업 기반 등 **수산식품산업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식품클러스터 **기능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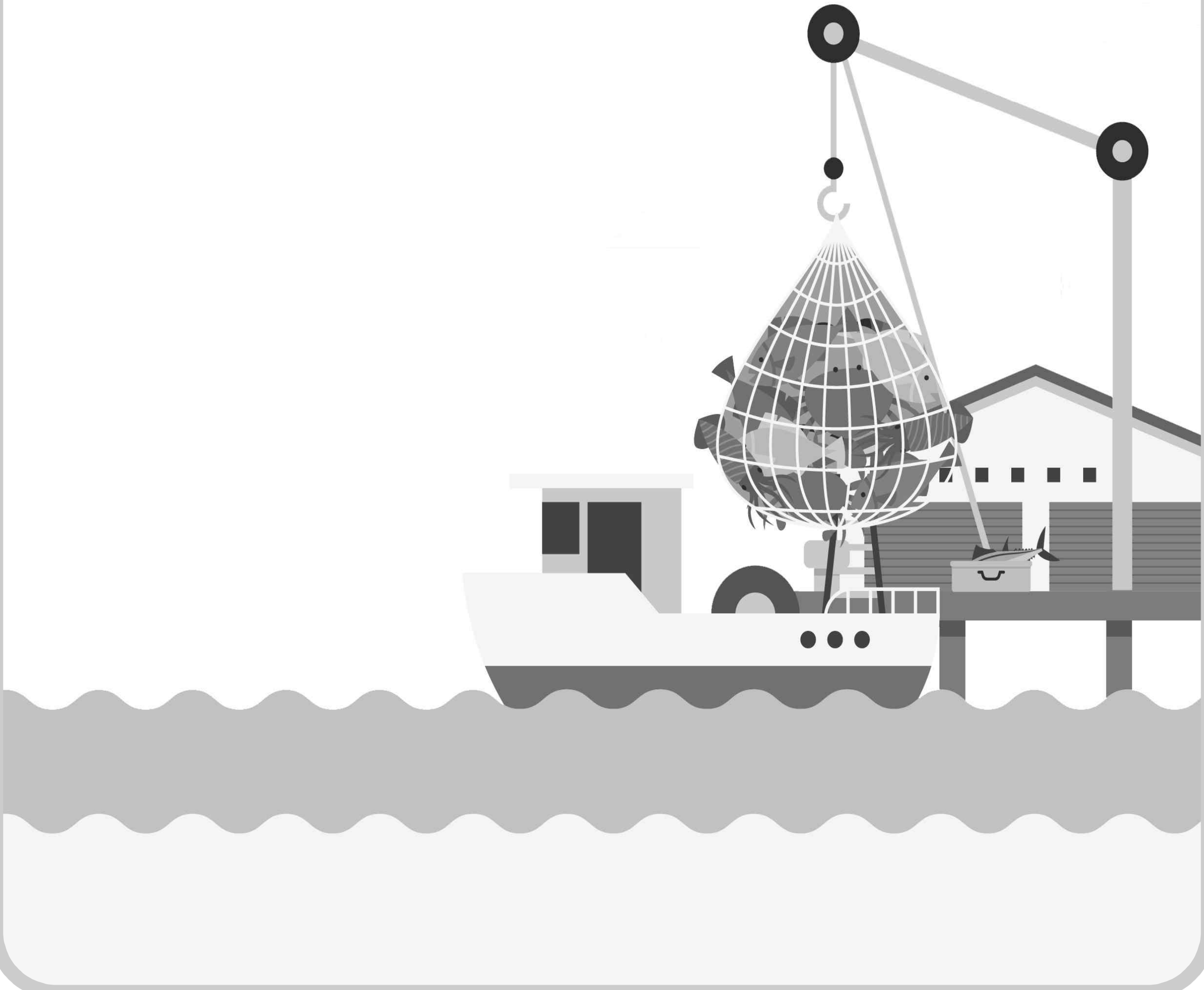
□ **(추진계획)** 주요 권역별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반 조성 및 집적·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수산식품클러스터 총 5개소**(잠정) 조성

ㅇ **선도사업**으로 국내 최대 수산업 권역인 **전남·부산**에 **클러스터** 구축(~'25) 및 **향후** 선도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권역**에 **3개소** 추가 조성 예정('26~'30)

2 수산식품클러스터 추진 현황

단계별	사업내용
1단계	☞ **전남권과 부산권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 **(전남)** 종합단지형(임대형 가공공장, R&D시설, 창업·수출센터 등) 조성 * 총사업비 1,089억원 /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 일원 / '19년 예타 면제 ▶ **(부산)** 네트워크형(수산식품개발플랜트(R&D), 수출거점복합센터(수출지원), 혁신성장 지원센터(창업·수출·홍보지원)) 조성 * 총사업비 813억원 / 부산 서구 암남동 일원 / '21년 예타 통과
2단계	☞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상지 선정' 후 단계적 추진**(추가3개소, 잠정)

6. 국제협력분과 토론문



01 김병건 / 동원산업 상무

원양산업 분야는 그 어느때보다 자원국들의 규제와 해양 환경오염과 선원의 인권보호 등 해가 거듭될 수록 컴플라이언스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업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각종 국제 규제와 준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 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전 세계 어떤 원양산업 기업보다 선제적이자 선도적인 원양산업의 롤모델의 역활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몇가지 사안들에 대해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 원양산업도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업계 특성을 고려한 적용 검토요청

육상에서 끝임없이 발생되는 근로자들의 사망과 중대 사고에 대한 정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2022.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원양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선원법과 원양산업 발전법에 의해 육상산업계와는 환경이 다른점이 고려되어 관리가 되어왔음에도 금번 시행에 포함되어 있어 업계에서는 향후 경영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2. 어선원 ILO 발효 검토

선원의 인권보호는 정부의 의지이전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원양업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에서 주장하는 선원 인권이 비보호 되고 있다는 다소 자극적인 보고를 근거로 2024년 어선원 ILO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이는 향후 보다 양질의 근로조건을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경쟁국가인 일본, 대만 같은 국가가 시행하는 시점에 우리나라도 같이 시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경쟁국가보다 먼저 시행하여 얻는 잇점보다 원양산업의 경쟁력의 손실이 더 큰 정책의 시행은 국익에도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02 최경삼 / 한국원양산업협회 전무

<원양어업의 당면 현안과 과제>

□ 원양어업의 과거와 현재

○ 원양어업의 정점기 대비 어선 75%, 생산 50% 각각 축소되었으나 국내수산물 수급 및 수출 주력 산업으로 큰 역할
- 어선 : (‘77) 850 척 →(’20) 210척 (△640척 /75%축소)
- 생산 : (‘92)1,024천톤 →(’20) 437천톤 (△587천톤 /57% 축소)
- 연근해어업 생산량 약 50%정도를 원양에서 생산, 국내공급 및 수출

□ 원양어업의 여건변화

○ 연안국들이 조업국가 간 경쟁유발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입어료 이외의 투자, ODA사업 등을 고려해 조업권을 할당하는 추세로 입어료 추가 부담 및 조업여건 악화
○ 어선노후화 및 금후 내국인 해기사 부족으로 인한 조업손실 및 안전 문제 우려
- 전문인력 육성층인 30대(30~39세)가 2.6%(10,583명중 27명)에 불과, 후계자 단절위기 (’20 현재)
 * 31년 이상 노후어선 79%(210척중 166척)
 * 군 복무를 대신하는 20대(180명/17%)의 경우 승선근무 예비역 종료 후 승선기피로 대부분 하선

□ 원양어업의 중요성

○ 수산식량 해외영토 확보 및 정부의 외교력이 미치지 않는 연안국과의 민간 외교 역할
 * 연안국 정부대표(장관 등)와 원양업계 매년 어업협상
○ 연근해어업 생산한계의 대체 어장으로 해외수산 자원을 개발·공급하는 국가식량 산업
- 연근해 어선세력의 0.5% 수준인 원양어업의 생산량은 연근해 어선 생산량의 약50% 내외 수준 및 참치, 이빨고기 등 수산물 수출 주력산업
 * 2020 어선 수(생산/천톤) : 연근해 42,775척(‘19 : 912, ’20 : 932)/ 원양 210척(‘19 : 512. ’20 : 437)

□ 미래 대응 방향

○ 원양어장을 해양영토 확장차원의 해외 국가식량 안보산업으로 육성·관리
- 안정적인 해외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ODA사업 확대 등을 통한 연안국들과 어업협력 강화
○ 단절 위기인 미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야 될 젊은 해기사 육성·확보대책 마련시급
○ 원양어선 노후대체 신조 안전펀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수요창출사업 운영

03 정명화 / KMI 국제수산연구실장

수산어촌 미래발전 방향 원탁회의의 국제협력분과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토론 의제는 첫째 원양어업의 인력난, 둘째, 원양어업의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임

첫째, 원양어업의 해기사 부족 현상과 해기사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함. 통계적으로 보면 2020년 원양어선 해기사 1,058명 중 20대가 17%(180명)이고, 30대가 2.6%(27명), 40대 이상이 약 80%(851명)를 차지하고 있음.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20대는 군 복무를 대신하는 승선 근무 예비역이기 때문에 예비역 종료 후에는 대부분 하선함. 해기사가 세대간으로 연속되지 못함으로써 해기사가 점차 고령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있음
해기사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 인력유출 문제임. 조업 경쟁을 하는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우리나라의 유능한 선장을 스카웃해감으로서 인력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해기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미래 해기사가 될 인력을 육성시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사업 확대를 통한 원양어선 신조와 함께 원양어선 안전과 근로 조건을 국제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외국인 해기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기 위해 국내 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둘째, 공해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FAO는 연승에 의한 바닷새 부수어획 저감을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1998년 마련하였고, 2004년에는 바다거북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였음. FAO가 각 국제수산기구에 해당 지침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각 지역수산기구에서는 바닷새,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보존 조치안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FAO는 2021년 해양포유류 혼획저감방지를 위한 가이라인을 마련하였음.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조치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외에도 이해관계자간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앞서 바닷새, 바다거북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FAO의 가이드라인은 RFMO 차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원양업계의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가 입어하는 투발루, 키리바시 등 연안국과 해양포유류 자원조사 등의 협력 사업 추진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더불어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을 위한 어구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임

04 한덕훈 / KMI 대외협력사업부장·국제개발협력센터장

2021년은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내외적 어려움이 큰 시기였음. 델타바이러스 출현으로 큰 위기를 겪은 뒤, 최근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에서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일상으로 회복이 진행된 상태에서 개발도상국의 백신과 건강 문제에 대한 큰 갭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구의 모든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고 있음

또한 개도국의 보건상황에 대한 고려와 지원 없이는 글로벌 코로나 종식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고 생각됨. 이러한 보건분야 만이 아니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국제협력은 계속 강조되고 있음.

특히 해외로의 수산물 수출 꾸준한 확대, 원양어업을 통한 국내반입 및 수출, 안전한 수산식품의 확보, 공정하고 합법적인 조업과 어선원 노동권리, 어선 안전의 보장이라는 키워드는 우리 정부와 업계가 2021년 한해 동안 씨름한 문제이고 향후에도 계속 강조될 중요한 이슈일 것임.

한국 전체적인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부처ODA는 올해 약 118.6억원으로 2020년 155.8억원에서 다소 줄었으나 총 25개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부처 차원에서 꾸준히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해수부 사업의 전반적 특징은 과거의 물자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연안재해, 해양산성화 대응, 수산양식, 해양조사, 수산자원관리 등 해양과학기술을 포함한 지식공유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음. 즉, 해수부 각 산하기관의 **특장점을 살리는** ODA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특히,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이슈에 대한 대응**이 ODA전체 분야에서도 크게 강조되고 있어 청색경제 발전, 해양쓰레기, IUU어업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존과 개발, 해양과학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을 포함한 **융합사업**과 함께 타 분야와 연계한 사업의 추진은 향후 ODA분야에서 계속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FAO에서는 BPI(Blue Port Initiative)를 제안하여 **어항**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파급력**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음. 그 의미는 선진국에서는 어항이 마리나 등 관광과 친환경적 공간의 역할이 강조되며,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아 타개와 식량안보를 위한 어민의 어획물의 첫 양륙지로서의 어항의 역할과 함께 배후부지를 활용한 내륙 수산유통의 중요성이 강조됨.

또한 어항 유관시설이 어민들의 지역복지공간, 해양오염 등 대응 교육시설로 활용되어 경제적인 면만이 아닌, 사회적, 친환경적 대응의 거점으로서 어항의 잠재력을 다시 조명하고 있음. FAO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22년도는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지역별 워크

샵과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힘쓸 계획임. 우리나라도 어촌뉴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바, 국내적으로도 물적설비와 어민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좋은 사업 모델 발전시켜서 해외와의 ODA사업으로 개발하여 확산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IUU어업분야에서는 IUU어업개념이 국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IMO와 ILO에서 각각 채택된 어선안전을 강화하는 **케이프타운협약**(CTA)와 어선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C188협약**의 비준을 국내적으로 검토 중임. 동 협약을 비준한 연안국, 항만국들은 물론이고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국내법으로 어선원보호와 어선안전 조치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해당국 해역에서 조업시 이의 준수를 요청하고 있어 국제적인 큰 추세임을 부인하기 어려움. 또한 FAO 항만국조치협정을 통해 항만국의 강화된 관리조치를 통해 글로벌스탠다드의 미준수는 결국 사업자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어 정부와 산업계 모두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원책도 정비되어야 할 것임.

05 박광범 / 수협수산경제연구원 경영조사실장

<수협중앙회 민간 수산분야 국제 협력 현황>

1. 주요 활동현황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수산위원회 의장기관

○ '09년부터 22개국 24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ICA 수산위원회 의장기관으로서 전 세계 수산분야 협동조합 운동 주도

○ KSP, 장학생 지원 등을 통한 수산분야 국제협력 강화

□ 개도국과 수산분야 지식공유(KSP)교육 시행

○ 한국 수산업 및 수협 성공 사례 전파를 통한 수산분야 선도(민간외교)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등

□ 개도국 수산장학생 프로그램

○ 인도네시아, 터키 등 개도국 수산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부경대 대학원 수산과정 매년 2명 지원(현재 4명 과정 이수 중)

– ICA 수산위원회 : 생활비 등 등록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 지원

– 부경대 : 4학기 등록금 지원

□ 개도국과 수산분야 물품 지원

○ 어로활동 등에 필요한 어구, 전산화 등을 위한 컴퓨터 지원

□ 한국 수산업 및 수협에 대한 이해 증진

○ 한국 수협 및 수산업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한국의 수협」 발간

2. 개선 사항

□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 협력 강화 및 정부 지원 필요

○ 수산장학생 프로그램과 같이 기관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강화

○ KOICA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연계 필요

06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원양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을 위한 TF 구성·운영 계획(안)>

□ 배경 및 현황

○ **(배경)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1.8.3, 장관보고)의 **후속조치**로 3번째 추진**과제인 ODA 연계 강화사업* 추진 필요**

* 장관님 주재 업계 간담회(‘21.5월)시 주요 업계에서 전략적 ODA 확대 건의

○ **(현황)** 과거 **물자지원 위주 ODA사업**이 **개도국 역량개발 중심**으로 개선되는 과정에서 **태평양 도서국 지원 상대적 저조**

□ 추진계획

○ **(사업 계획)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및 **커뮤니티 센터 건립, 어선원 양성** 등 **지역 주민 역량강화 사업** 추진

< 투발루 어촌뉴딜 지원사업 사업(안)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예산(억원)	‘23년예산(억원)	총사업 기간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립	프로젝트	22	10	2023~2025
	어선원 양성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연수사업	8	-	2023~2025
	친환경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및 어시장 리모델링	프로젝트	24	5	2023~2025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프로젝트	6	3	2023
	합 계	-	60	25	2023~2025

□ 향후 계획

○ **(T/F 구성) 원양 어촌뉴딜 ODA 사업 TF 구성·운영**(‘21.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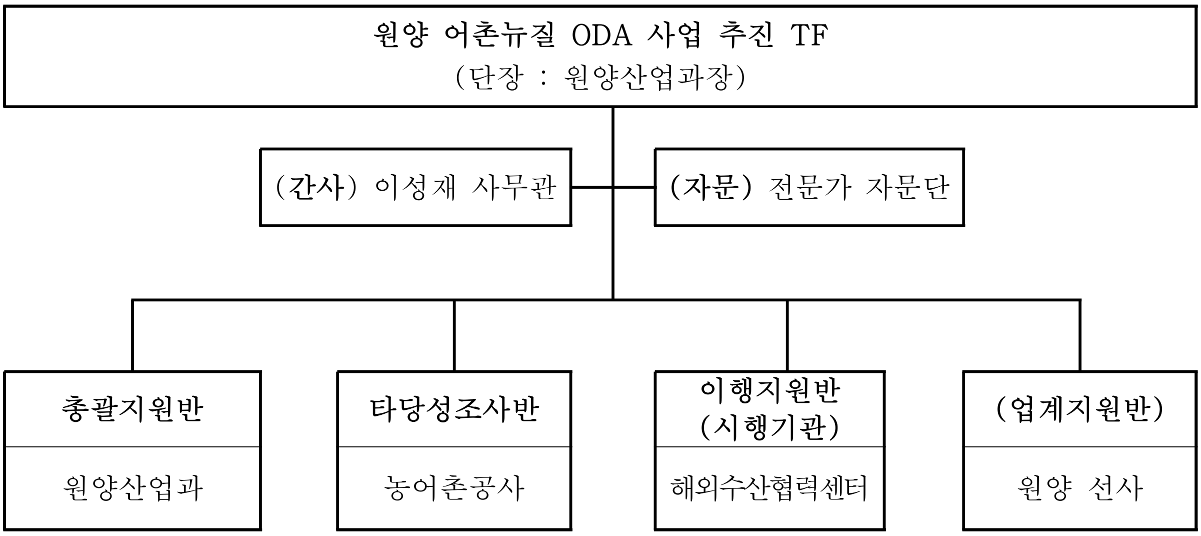
○ **(관련자료 제출)** 수원국 관계기관 프로젝트 제안서, 수원국 수총기관 공문, 사전 타당성 조사결과 **제출**(협력센터, ’22.2월말)

○ **(관계부처 협의) 외교부** 협의(‘22.4월), **국조실** 심의(’22.5월), **기재부** 심의(‘22.6~8월)

붙임 1 원양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 T/F 구성·운영 계획(안)

□ T/F 구성 및 운영(안)

○ **(구성) 총괄지원반**(원양산업과), **타당성조사반**(농어촌공사), **이행지원반**(원양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외부 전문가**(항만협회·KMI) 등



○ **(운영)** '21. 12. 2. ~ 어촌뉴딜 ODA 1차 사업 종료시까지

□ T/F 반별 역할

TF 반	역 할	담당 부서
총괄지원반	◆ 원양 어촌뉴딜 ODA 사업 TF 총괄 지원 ◆ 외교부 협의, 기재부 심의 등 관계부처 협의·대응	원양산업과
타당성조사반	◆ 사전 타당성조사 실시	농어촌공사
이행지원반 (시행기관)	◆ 수원국 프로젝트 제안서, 수총기관 공문 등 예산 관련 자료 작성 등	해외수산협력센터
업계지원반	◆ 건물 내 컨텐츠 확보 관련 지원	원양 선사
전문가 자문단	◆ 사업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자문	항만협회 KMI 등

붙임 2 향후 추진 계획 및 ODA 사업 절차

단계별 시기	내용	주관
사업 발굴 – 재외공관과의 협의 (상시)	– 사업 주요 단계마다 재외공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업 필요 ※ 재외공관과의 협의 시 주관기관을 경유하는 것이 원칙	시행기관
PCP 준비 (n-2년 12월까지)	– 수원국 사업요청서(PCP: Project Concept Paper) 접수	시행기관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 현지조사) (n-1년 2월 중순까지)	– 현지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확인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100만불 이상 사업 타당성조사단에 민간전문가 포함 필요	각 시행기관
주관기관의 시행계획 초안 작성 (n-1년 1월 말~2월 초)	– 차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초안 작성 – PCP, 사전타당성 조사, 수총기관 공문 요청 등	외교부
내부 사업 심사 (n-1년 2월 중까지)	– 기관별 사업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신규 후보 사업 검토	전문기관
차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 및 외교부에 제출 (n-1년 2월 말~3월 초)	– 심사/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차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수정 – **(1) 수총기관 공문, 2) PCP, 3) 사전타당성 조사, 4) 환경·사회 영향 설문지** 포함 외교부에 제출	시행기관
재외공관 및 민간전문가 예비검토, 협의회 개최 (n-1년 3월 중순~5월)	– 해당 재외공관에 무상원조 사업(신규)에 대한 예비 검토 요청 – 무상원조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한 주관기관 차원의 조정·심의 완료	외교부/ 재외공관/ 시행기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의결 (요구액) (n-1년 5월~6월)	– 차년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의결	국개위 (국조실)
예산당국 심의 (n-1년 6-11월)	– 국개위에서 의결한 ODA 종합시행계획을 기초로 각 시행기관은 기획재정부 및 국회 측과 예산 협의 ※ 1차(6월), 2차(8월), 3차(9월~10월)	예산당국/ 시행기관
예산 및 종합시행계획 확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의결 (확정) (n-1년 12월경)	– 12월 초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상의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여 국개위 확정	국조실/외교부/ 시행기관/ 국개위(국조실)
사업 실시 (n년)	– 사전 준비 완료시 국별/기관별 상황에 맞게 사업 실시	시행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 진행 및 종료 단계)	– 중간/종료 평가를 통한 사업 성과 측정 –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시행기관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 진행 및 종료 단계)	– 외교부 이행점검 및 재외공관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ODA 사업 점검 ※ 이행점검시 시행기관, 민간전문가 참여	외교부/ 재외공관

MEMO...

MEMO...

MEMO...

MEMO...